

---

2025-6호

---

미국 「AI 실행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주요국 AI·디지털 정책 모니터링 리포트

# The LENS



The LENS는 주요국의 AI·디지털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기적 업데이트를 통해 정책 변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평가하는 정책 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

## | 작 성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오 연 주 수석연구원 (053-230-1295, oyeonj@nia.or.kr)

명 사 은 수석연구원 (053-230-1279, happym@nia.or.kr)

윤 정 영 선임연구원 (053-230-1283, jy108@nia.or.kr)

이 정 민 주임연구원 (053-230-1205, jmlee@nia.or.kr)

## | 기 획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실

이 용 진 실장

권 정 은 팀장

오 연 주 수석연구원

명 사 은 수석연구원

윤 정 영 선임연구원

이 정 민 주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수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ICT진흥 및 혁신기반조성(정보화, R&D)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장 | 「AI 실행계획」 수립 배경 및 개요

## 1. 「AI 실행계획(AI Action Plan)」 수립 배경

### 1-1 'AI 경쟁에서 승리하기(Winning the AI Race)'

- **(AI 규제 완화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임 때와 달리 '24년 재출마 시점부터 AI 관련 공약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중국과의 경쟁에서의 승리 및 AI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강조<sup>1)</sup>
  - '24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정책\*에서 "AI 혁신을 저해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에 기반한 AI 개발을 지지한다"고 선언
  - \* Party Platform : 대선 직전 전당대회에서 채택되는 미국 정당의 공식 정책 문서로,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정당의 입장을 체계화하고 정책 목표, 정책 철학, 입법 우선순위 등을 제시
  - 아울러 트럼프 진영은 후보 당시 "AI 분야에서 미국을 최강국으로 만들자(Make America First in AI)"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철폐를 위한 정책 구상
- **(취임 후 본격 행보)**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1월 20일 취임 직후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도입된 AI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
  - 취임 당일 행정명령 제14148호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의 조기 철회」\*에 서명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14110호 「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을 철회
  - \* Initial Re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 전임 행정부의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미국의 통합, 공정성, 안전, 번영을 도모하는 정책 추진
  - \*\*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AI 시스템의 안전·보안·책임성 보장을 위한 8대 원칙을 기반으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을 통한 책임 있는 AI 생태계 조성
  - 이어 1월 23일 행정명령 제14179호 「AI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를 통해 AI 혁신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고 AI 글로벌 패권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의지 천명
  - \*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 미국의 AI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기존 AI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신규 AI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적 경쟁력 및 국가안보 증진
- **(AI 경쟁에서의 승리 약속)**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7월 23일 백악관이 주관한 AI 정책 행사\* 연설에서 전임 행정부의 AI 정책을 비판하며 글로벌 AI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방향 제시
  - \* 백악관이 'AI 경쟁에서 승리하기(Winning the AI Race)'라는 제목으로 주관한 팟캐스트 연계 AI 정책 행사
  -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기술, 인력, 인프라를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는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필요성 역설
  - 이 연설은 「AI 실행계획」이 합리적 규제 환경 조성을 통한 AI 혁신 가속화와 미국 주도의 AI 기술 우위 확보를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

“ 오픈AI, 구글, 메타,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미국이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물론 규제는 있겠지만 상식적이고 현명한 규제일 때, 그때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략)

지금 우리는 세상을 황금기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그 황금시대는 미국 근로자들이 건설하고, 미국 에너지로 움직이며, 미국 기술로 작동가고, 미국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자유롭고,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sup>2)</sup>

## 1-2 미국 AI 정책 변화와 ‘AI 실행계획’의 위치

- **(미국 AI 정책 변화)** 오바마 행정부 이후 약 10년간의 미국 AI 정책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각 행정부는 상이한 정책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AI 패권 경쟁에 대응
  - 「국가 AI R&D 전략계획」 수립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행정부는 AI 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의 자율적 발전을 중시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마련에는 소극적인 접근 유지
  - 이와 비교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I 실행계획」을 통해 정부가 직접 AI 산업 발전 방향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AI 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 본격화
  - 이하에서는 행정부별 AI 정책 변화 과정 분석을 통해 「AI 실행계획」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에 영향을 미친 정책적·정치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
- **(오바마 2기 행정부 : '13~'16)** 오바마 행정부는 AI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던 '16년, 집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혁신 및 AI 기반 미래 사회에 대한 정책 방향 최초 제시
  - '16년 과학기술정책실 주도로 AI 워크숍 및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10월 「AI의 미래를 위한 준비」\* 및 「국가 AI R&D 전략계획」\*\* 발표
    - \*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I : 공익을 위한 AI 활용, 연방정부 AI 활용, 규제혁신, AI 인재 양성, 고용 시장 영향 파악, 안전-거버넌스 설계 등 AI의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제시
    - \*\* National AI R&D Strategic Plan : 장기적 투자, 인간-AI 협업, 법적·사회적·윤리적 대응, 안전·보안, 데이터셋 구축, 측정·표준, 연구개발 인력 등 7개 전략을 다루며 이후 두 차례('19년, '23년) 업데이트된 전략 발표
  - '16년 12월에는 「AI, 자동화,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AI 및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과 경제적 과제를 진단하고 대응을 위한 정책 권고
    - \*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 집권 말기라는 시기적 한계로 실질적 정책 이행은 제한적이었으나, AI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적 대응이라는 양면적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최초 제시한 점에서 의의
- **(트럼프 1기 행정부 : '17~'20)**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안보 및 경제 전략의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법 제정과 행정명령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임기 내 정책 이행까지는 이르지 못함

- '19년 행정명령 제13859호 「미국의 AI 리더십 유지」\*를 발표하고,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연방 데이터·컴퓨팅 자원 개방, 기술 표준 정립,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5대 중점 방향 설정
  - \*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 임기 말인 '20년에는 비국방 분야 최초로 국가 AI 전략을 법제화한 「국가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연구개발, 협업, 인력 양성, 표준 및 정책 조율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제도 기반 구축
  - \*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
- 법 제정으로 국가AI이니셔티브실, 국가AI자문위원회, 국가AI연구소·연구자원 등 주요 조직 및 인프라의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나, 집권 초 AI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결정적 시기에 공백을 남김
- **(바이든 행정부 : '21~'24)**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의 AI 경쟁력 확보 기초를 계승하되 AI 안전성과 윤리적 개발을 정책 전면에 배치하여 책임감 있는 AI 리더십 표방
  - '22년 「반도체 및 과학법」 제정을 통해 핵심 기술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연방 투자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산업 기반 마련
    - \* CHIPS and Science Act :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촉진,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 강화와 연방 투자 확대를 위한 포괄적 산업 육성법
  - 과학기술정책실은 '22년 10월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통해 안전성, 차별 방지, 프라이버시 보호, 고지 및 설명, 인간 개입 보장 등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민간 영역의 책임 있는 AI 개발 촉구
    - \*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 '23년 생성형 AI 부상에 따른 주요 AI 기업과의 자율 안전 협약 체결 및 10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사용」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포괄적 AI 감독체계 구축
  -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규범, 안전, 포용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통해 AI 정책을 제도화하고 국제적 책임을 확대한 시기로 평가됨
- **(트럼프 2기 행정부와 「AI 실행계획」)** 앞선 행정부들이 민간 주도의 자율적 발전을 중시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테크기업 로비, 중국과의 패권 경쟁, 에너지 산업 연계, 이념적 편향 비판 등에 대응하여 AI를 핵심 국정 과제로 격상하고 「AI 실행계획」을 수립
  - 오픈AI, 구글, 메타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AI 혁신 가속화와 규제 완화를 위한 적극적 로비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
  - 중국의 AI 기술 발전과 국가 주도 AI 전략이 미국의 기술 패권에 위협이 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 전략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두
  - 전력 집약적인 AI 산업 확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석유·가스 산업을 AI 인프라의 기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흐름으로 이어짐
  - 기존 AI 시스템들이 진보적 편향을 보인다는 보수 진영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AI를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가치 체계와 이념 간 경쟁의 상징으로 재정의하는 정치적 동력 형성
  - 이러한 배경 하에 「AI 실행계획」은 기술 주권, 산업 인프라, 글로벌 표준, 이념 경쟁 등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연방정부가 방향성을 설계하고 국가 전략으로 진화

## 2. 「AI 실행계획」 개요

### 2-1 계획 수립 추진 경과

- (‘25년 1월) 행정명령 제14179호 「AI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1.23 서명)를 통해 「AI 실행계획」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AI 정책 방향에 대한 청사진 마련에 착수
  - 이 계획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 경제적 경쟁력 강화, 국가안보 증진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AI 패권을 지속·강화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
- (‘25년 2월)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공개 정보 요청(RFI)을 통해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우선 정책 과제 관련 의견 수집
  - 민간 기업(291개), 협회(195개), 학계(82개), 비영리 단체(194개) 등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총 10,067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높은 사회적 관심 확인

[ 조직별 주요 요구사항 요약 ]

| 민간 기업 10대 요구사항       | 협회 10대 요구사항             |
|----------------------|-------------------------|
| 1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 1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
| 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 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
| 3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저력 공급 | 3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저력 공급    |
| 4 연방정부 AI 도입 가속화     | 4 의료 분야 AI 적용 및 안전성 확보  |
| 5 오픈소스 AI 생태계 지원     | 5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제고        |
| 6 AI 인력 양성 및 교육      | 6 AI 인력 개발 및 교육         |
| 7 사이버보안 및 AI 보안      | 7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보장     |
| 8 AI 기술 수출통제 및 국가안보  | 8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AI 활용 지원  |
| 9 데이터 접근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 | 9 국제 협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10 중소기업 지원           | 10 AI 기초연구 및 인프라 투자 확대  |
| 학계 10대 요구사항          | 비영리 단체 10대 요구사항         |
| 1 AI 교육 및 인력 양성      | 1 AI 안전성 및 위험관리         |
| 2 연구 인프라 및 컴퓨팅 지원    | 2 AI 거버넌스 및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
| 3 산업계-학계-연구계 협력 강화   | 3 AI 윤리 및 인권 보호         |
| 4 AI 기초연구 지원 확대      | 4 오픈소스 AI 지원            |
| 5 오픈소스 AI 지원         | 5 아동 보호 및 안전 확보         |
| 6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 6 AI 교육 제공 및 리터러시 증진    |
| 7 학제간 AI 연구 촉진       | 7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보장     |
| 8 데이터 접근성 개선 및 표준화   | 8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
| 9 윤리적 AI 개발          | 9 사회적 형평성 및 포용성 확보      |
| 10 분야별 특화 AI 솔루션 개발  | 10 국제 협력 및 표준화 주도       |

※ 10대 요구사항은 각 단체 의견서에서 발췌한 의견 모음을 챗GPT 및 클로드로 교차 검증하여 도출

※ 민간 기업, 협회, 학계, 비영리 단체에서 제출한 주요 의견은 25페이지 [부록1]에서 확인

- (‘25년 7월) 「AI 실행계획」 발표와 동시에 데이터센터 허가 절차 완화, AI 편향 방지, 미국산 AI 수출 관련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실행계획의 주요 권고사항 이행에 착수

[ 「AI 실행계획」과 연동하여 발표한 3개 행정명령 ]

| 번호       | 제목                      | 주요 내용                                                                                                                             |
|----------|-------------------------|-----------------------------------------------------------------------------------------------------------------------------------|
| EO 14318 |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연방 허가 절차 가속화 | AI 데이터센터 및 핵심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규제 완화, 연방 토지 제공,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대규모 산업 계획 수립                                                          |
| EO 14319 | 연방정부 내 좌편향 AI 방지        |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AI 언어모델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 이념적 편향을 배제하고, 진실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AI만 사용토록 규정                                                     |
| EO 14320 | 미국산 AI 기술 스택 수출 촉진      | 미국산 AI 기술 스택의 수출을 촉진하고,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및 지정학적 우위 확보를 위한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American AI Exports Program)’을 신설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재정·외교 자원을 총동원 |

## 2-2 계획 구성 및 추진 체계

- (계획 구성) 본 계획은 ① AI 혁신 가속화, ② AI 인프라 구축, ③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 등 3대 전략축, 30대 실행 과제, 103개의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됨
  - 전략축 1 :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과 산업 확산을 촉진하여 미국의 AI 혁신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강화
  - 전략축 2 : AI 생태계 전반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력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확충하여 기술 경쟁 우위 확보
  - 전략축 3 : 미국산 AI 기술·제품의 수출 촉진과 동맹국 간 규범 정합성 확보,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보안 조치를 통해 글로벌 AI 질서 주도권 강화

[ 「AI 실행계획」 3대 전략축 및 30대 실행 과제 ]

| 전략축                         | 실행 과제           |                    |                |                |                    |
|-----------------------------|-----------------|--------------------|----------------|----------------|--------------------|
| 전략축 1 :<br>AI 혁신 가속화        | 1 규제 완화 및 제거    | 2 표현의 자유 보호        | 3 오픈 생태계 장려    | 4 AI 도입 촉진     | 5 노동자 역량 강화        |
|                             | 6 차세대 제조업 지원    | 7 AI 기반 과학 투자      | 8 세계적 데이터셋 구축  | 9 AI 과학 발전     | 10 AI 신뢰성 강화       |
|                             | 11 AI 평가 생태계 구축 | 12 정부 AI 도입 가속화    | 13 국방 AI 촉진    | 14 AI 혁신 보호    | 15 AI 생성 미디어 위협 대응 |
| 전략축 2 :<br>미국 AI 인프라 구축     | 1 인허가 간소화       | 2 전력망 개발           | 3 반도체 제조 역량 재건 | 4 고보안 데이터센터 구축 |                    |
|                             | 5 숙련 인력 양성      | 6 인프라 사이버보안 강화     | 7 AI 안전 설계 촉진  | 8 AI 사고 대응     |                    |
| 전략축 3 :<br>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 | 1 미국산 AI 수출     | 2 중국 영향력 견제        | 3 AI 컴퓨팅 수출통제  | 4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                    |
|                             | 5 글로벌 정합성 확보    | 6 프런티어 AI 모델 위험 평가 | 7 바이오 안보 투자    |                |                    |

- **(추진 체계)** 「AI 실행계획」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사이니셔티브법」 및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명령 제14110호와 비교하여 주요 연방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추진 체계를 가짐

- 대통령실 직속 기관 : 과학기술정책실, 관리예산국, 국가안보회의 등은 주로 AI 연구개발, 규제, 도입, 보안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연계하는 정책 총괄·조정 역할 수행

| 조직명                                                                     | 고유 업무                       | 담당 정책 권고사항                                                                                                                                                   |
|-------------------------------------------------------------------------|-----------------------------|--------------------------------------------------------------------------------------------------------------------------------------------------------------|
| 과학기술정책실<br>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 과학기술 정책 자문, 연방 연구개발 예산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고도화</li> <li>연방 규제혁신 및 민간 의견 수렴</li> <li>AI 컴퓨팅 자원 접근성 및 보안 확보</li> <li>생명공학 분야의 AI 안전성 강화</li> </ul> |
|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b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         | 연방 기관 간 과학기술 정책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연구를 위한 고품질 데이터 기반 조성</li> </ul>                                                                                    |
| 관리예산국<br>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 예산 편성 및 검토, 규제 및 행정명령 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규제 전면 정비</li> <li>규제 기반 AI 예산 차등 지원</li> <li>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li> <li>고영향 기관 대상 AI 시범 사업</li> </ul>           |
| (산하) 최고AI책임자협의회<br>Chief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 Council, CAIOC | 연방 기관 AI 정책 조정 및 AI 거버넌스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AI책임자 협의회 제도화</li> </ul>                                                                                            |
| 국가안보회의<br>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 국가안보 정책 조정 및 수립, 신기술 안보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보안 AI 데이터센터 기술 표준 수립</li> <li>우려국 수출통제용 위치 검증 기술 활용</li> </ul>                                                       |

- 부처 및 산하 기관 : AI 표준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 군사 AI 활용 및 사이버안보 강화, AI 인재 양성, AI 인프라 개발 등 부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정책 과제 집행

| 조직명                                                                          | 고유 업무                        | 담당 정책 권고사항                                                                                                                                            |
|------------------------------------------------------------------------------|------------------------------|-------------------------------------------------------------------------------------------------------------------------------------------------------|
| 국무부<br>Department of State; DOS                                              | 외교 정책 기획 및 실행, 국제 협정 및 외교 교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기구 내 미국 중심 AI 거버넌스 확대</li> <li>AI 글로벌 동맹 구축을 위한 기술 외교 전략 수립</li> <li>국제적 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교육 기반 보완</li> </ul>    |
| 국방부<br>Department of Defense; DOD                                            | 국방 정책 수립 및 군사력 운용, 방위 연구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 분야 AI 도입 및 역량 강화</li> <li>AI 보안 및 사이버 위협 대응</li> <li>산업 기술 경쟁력 및 전략 투자</li> <li>국제 협력 및 기술 수출 통제</li> </ul> |
|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br>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 미래 군사기술 개발, 첨단 AI·자율시스템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li> </ul>                                                                             |
| 국토안보부<br>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 테러 및 위기 대응, 국토안보 정책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시스템의 보안성 및 신뢰성 검증 강화</li> <li>AI 위협 정보 공유 및 민관협력 기반 구축</li> </ul>                                           |
| (산하) 사이버안보·인프라 보안국<br>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 | 사이버보안 총괄, 국가 중요 인프라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이버보안 대응 매뉴얼에 AI 시스템 고려 사항 포함 및 관련 기관 담당자 간 협의 의무화</li> </ul>                                                  |

| 조직명                                                                              | 고유 업무                                    | 담당 정책 권고사항                                                                                                                                                                                                 |
|----------------------------------------------------------------------------------|------------------------------------------|------------------------------------------------------------------------------------------------------------------------------------------------------------------------------------------------------------|
| 교육부<br>Department of Education; ED                                               | 교육정책 수립 및 조정,<br>교육격차 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강화</li> </ul>                                                                                                                                 |
| (산하) 직업·기술·성인교육국<br>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 OCTAE     | 직업교육, 성인 기초교육<br>및 평생학습, 재취업 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지역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li> </ul>                                                                                                                                |
| 노동부<br>Department of Labor; DOL                                                  | 근로자 권익 보호,<br>직업훈련, 노사관계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고도화</li> <li>노동시장 변화 대응 및 정책 기반 마련</li> <li>AI 인프라 직종 중심 인력 공급 기반 구축</li> <li>청소년·청년층 진입 경로 확대 및 등록 견습 활성화</li> </ul>                         |
| (산하) 노동통계국<br>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 노동시장 데이터 수집 및<br>분석, 통계 및 정보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도입에 따른 고용 변화 및 임금 영향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반 연구 수행</li> </ul>                                                                                                              |
| 법무부<br>Department of Justice; DOJ                                                | 연방법 집행 및 기소,<br>연방 수사기관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법 절차에 적용할 딥페이크 증거 표준 도입</li> </ul>                                                                                                                                 |
| (산하) 법무정책실<br>Office of Legal Policy; OLP                                        | 입법 자문 및 국회 대응,<br>정책·규제 간 충돌 조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증거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 제출</li> </ul>                                                                                                                                 |
|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br>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br>평가, 식품안전 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약제품 안전성 보장, 건강제품 규제 및 품질관리</li> </ul>                                                                                                                              |
| 상무부<br>Department of Commerce; DOC                                               | 산업 및 경제 성장 지원,<br>무역·수출 정책 수립,<br>기술 표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산업 생태계 기반 확충 및 기업 지원</li> <li>AI 표준·평가체계 개발 및 공공부문 도입 기반 마련</li> <li>AI 인력 양성 및 산업 직무 전환 대응</li> <li>AI 수출 촉진 및 기술 통제 강화</li> <li>국제 AI 규범 및 외교 전략 주도</li> </ul> |
|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br>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 AI, 양자, 사이버보안 등<br>기술 표준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인프라 및 컴퓨팅 접근성 확보</li> <li>AI 시스템의 표준화 및 신뢰성 제고</li> <li>AI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li> <li>과학 R&amp;D 융합 인프라 조성, 우수 인재 확보 및 전문 기관 지원</li> </ul>                   |
| (산하) AI표준혁신센터<br>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 CAISI                   | AI 안전성 평가 및<br>기술 표준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AI 위험 평가체계 구축</li> <li>보안 평가 체계 및 협력 거버넌스 강화</li> <li>AI 기반 사이버보안 대응 표준 및 보호체계 구축</li> </ul>                                                         |
| (산하) 국가통신정보청<br>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 통신·주파수 정책 총괄,<br>AI·데이터 거버넌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오픈소스 AI 모델 도입 촉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li> </ul>                                                                                                                   |
| (산하) CHIPS 프로그램 사무국<br>CHIPS Program Office                                      | 반도체 제조 투자 지원,<br>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HIPS 자금 수혜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 효율 제고 및 규제 요건 정비</li> </ul>                                                                                                                 |
| 에너지부<br>Department of Energy; DOE                                                | 에너지 정책 수립,<br>청정에너지 연구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응용 연구 및 실험 인프라 투자</li> <li>AI 신뢰성 검증 및 테스트 기반 강화</li> <li>AI 인프라 인재 양성 및 실무 중심 훈련 확대</li> </ul>                                                                  |
| 재무부<br>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USDT                                 | 재정·경제 정책 수립,<br>국세 징수 및 세제 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관련 교육에 대해 비과세 환급 가능한 국세법 적용 지침 발행</li> </ul>                                                                                                                     |

- 연방정부 독립 기관 : 기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보증 및 보안 기준 수립, 기초과학 연구 자원 구축, 연방정부 조달 체계 개선, 규제 정비 등 분야별 AI 정책 추진

| 조직명                                                                  | 유형                | 고유 업무                           | 담당 정책 권고사항                                                                                                                                               |
|----------------------------------------------------------------------|-------------------|---------------------------------|----------------------------------------------------------------------------------------------------------------------------------------------------------|
| 국가정보국<br>Office of the Director<br>of National<br>Intelligence; ODNI | 행정부 산하<br>독립 실행기관 | 정보공동체 총괄, 대통령<br>정보 자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보증 관련 표준 수립</li> <li>AI 취약점 정보의 책임 있는 공유 장려</li> </ul>                                                         |
| 국립과학재단<br>National Science<br>Foundation; NSF                        | 행정부 산하<br>독립 실행기관 | 기초과학 연구개발 지원,<br>STEM 교육 및 인력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과학 및 AI 연구 인프라 강화</li> <li>AI 기술 평가 및 신뢰성 확보</li> <li>AI 인재 양성과 직업 훈련 확대</li> <li>AI 인재 양성과 직업 훈련 확대</li> </ul> |
| 일반서비스관리청<br>General Services<br>Administration; GSA                  | 행정부 산하<br>독립 실행기관 | 연방정부 조달 및<br>자산관리, 공공건물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도입을 위한 조달 지원체계 구축</li> <li>공공-민간 첨단기술 이전, 역량 공유 프로그램 운영</li> </ul>                                             |
| 인사관리처<br>Office of Personnel<br>Management; OPM                      | 행정부 산하<br>독립 실행기관 | 연방정부 인사정책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 간 AI 전문 인력 교류 프로그램 도입</li> </ul>                                                                               |
| 정보공동체<br>Intelligence<br>Community; IC                               | 기관 간<br>연합체       | 정보 수집·분석, 국가안보<br>정보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보안 위협 대응 역량 강화</li> <li>AI 인프라 보안 기준 정립</li> <li>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고위험 AI 평가 역량 강화</li> </ul>                      |
| 연방거래위원회<br>Federal Trade<br>Commission; FTC                          | 독립 규제기관           |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br>유지, 디지털 기술 감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혁신 저해 우려가 있는 기존 명령(최종·동의·금지)에 대한 재검토 및 규제 정비</li> </ul>                                                        |
| 연방통신위원회<br>Federal<br>Communications<br>Commission; FCC              | 독립 규제기관           | 통신·미디어 규제, 디지털<br>접근성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신 관련 기관의 법적 권한 수행을 저해하는 AI 규제 여부 평가</li> </ul>                                                                   |
| 증권거래위원회<br>Securities and<br>Exchange<br>Commission; SEC             | 독립 규제기관           | 투자자 보호, 증권시장<br>규제, 금융서비스 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실험·공유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및 우수센터 조성</li> </ul>                                                                      |

## 2장 | 「AI 실행계획」 주요 내용

### 1. 전략축 1 : AI 혁신 가속화

#### [ 중점 정책 방향 ]

- 이념적 규제 탈피와 민간 주도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AI 정책 환경 조성 및 제도 정비
- AI 혁신 촉진과 산업 전반의 도입 확산을 위한 개방형·분산형 기술 생태계 기반 구축
- AI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법제 기반 정비
- 국방 및 연방 공공 부문 전반에 걸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AI 도입 촉진
- ‘AI 과학’의 발전과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 발전에 대한 연구 및 투자 추진

- **(규제 완화 및 제거)** 글로벌 AI 리더십 유지를 위해 민간 부문에 관료주의적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AI 규제를 집행하는 주(州)에 AI 관련 연방 지원 제한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현행 연방 규제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업 및 일반 시민 대상 정보 요청(RFI) 실시                                                                                                                       | OSTP  |
| 행정명령 제14192호 「규제 철폐를 통한 번영 촉진」에 따라 AI 개발 및 활용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규제·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폐지                                                                                             | OMB   |
| 주(州)별 AI 규제 환경을 연방 지원금 심사에 반영하여 규제의 실효성에 따라 지원 제한                                                                                                                        | OMB   |
| 주(州) 차원의 AI 규제가 「통신법」*상 연방기관의 책무와 권한 수행을 방해하는지 평가<br>* Communication Act of 1934: 통신 서비스 규제를 위해 제정된 연방법으로, FCC는 주(州)의 AI 규제가 연방의 통신 규제 권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지 판단할 법적·정책적 근거를 가짐 | FCC   |
| AI 혁신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기존 조사와 최종·합의·금지 명령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수정 또는 무효화 추진                                                                                                        | FTC   |

- **(표현의 자유 보호)** 연방정부는 교육, 업무, 미디어 소비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AI 시스템에서 자유로운 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객관적 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에서 허위 정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기후변화 관련 언급 삭제<br>*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NIST가 개발한 가이드라인으로, AI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원칙 및 절차 제시 | NIST  |
| 연방정부가 객관적이고 이념 편향이 없는 최첨단 대형 언어 모델(LLM) 개발자와만 계약하도록 연방 조달 지침 개정                                                                                                                        | -     |
| 중국 프런티어 AI 모델에 대한 중국 공산당 선전 문구 및 검열 여부 평가 연구 추진                                                                                                                                        | CAISI |

- **(오픈 생태계 장려)** 미국의 가치에 기반한 선도적인 오픈 모델 보유를 위해 오픈소스 및 오픈 웨이트(open-weight) AI 모델 생태계를 지원하고, 기술 혁신, 안보, 연구 경쟁력 강화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장기 계약 위주의 구조를 극복하고, 금융 시장(예: 스팟·선도 등) 메커니즘 도입으로 스타트업 및 학계의 대규모 컴퓨팅 접근성 개선                                                                                                        | DOC, NSF, NIST, OSTP |
| 국가AI연구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선도 기업들과 협력하여 학계와 연구자들에게 민간의 컴퓨팅, 모델, 데이터, 소프트웨어 자원 제공 확대<br>* National AI Research Resource: NSF의 주도로 국가 정보통신 관련 기관, 민간 기관, 비영리 기관 등과 시범 운영 중인 AI 연구 인프라 프로젝트 | NSF                  |
| 전국 연구자 및 교육자가 핵심 AI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AI연구자원 운영 기반 마련                                                                                                                               | NSF                  |
| 「국가 AI R&D 전략계획」을 신규로 수립·발표하여 차세대 AI 기술 연구 지원 지속                                                                                                                                 | OSTP                 |
|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오픈소스·오픈웨이트 공개 모델 채택 유도                                                                                                                                     | DOC, NTIA            |

- **(AI 도입 촉진)** 핵심 산업에 AI 도입 잠재력을 막는 요인을 해소하고, 전 연방 차원의 조율된 대응을 통해 미국 산업 전반에 AI 도입을 ‘우선 시도하는(try-first)’ 역동적 문화 조성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전국의 연구자, 스타트업, 기업이 AI 도구를 신속하게 배포·시험하고 데이터와 결과를 개방·공유하는 규제 샌드박스 및 AI 우수센터 구축 | FDA, SEC                  |
| 보건의료·에너지·농업 등 산업별 AI를 도입하고 AI 국가 표준 개발과 채택을 가속화하여 실제 과업에서 AI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측정  | DOC, NIST                 |
| 미국 및 경쟁국·적성국 간 AI 도구 채택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                                         | DOD                       |
| 안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있는 미국 외 프론티어 AI 프로젝트 정보 우선 수집·배포                              | IC, DOE, CAISI, NSC, OSTP |

- **(노동자 역량 강화)** 노동자 우선 AI 아젠다 실현을 위해 노동시장에 대한 AI 영향을 지속 평가하고 재교육을 비롯 노동자가 AI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 추진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교육·인력 양성 예산에서 AI 역량 개발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진로·기술 교육(CTE), 직업훈련, 견습 제도, 기타 연방 지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AI 역량 요소 통합                                                                                                                                                                                                                                       | DOL, ED, NSF, DOC |
| AI 관련 교육에 대해 비과세 환급 가능한 「국세법」 제132조* 적용 지침 발행<br>* 직무 관련 교육비를 고용주가 부담할 경우 근로자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 Treasury          |
|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AI 도입, 일자리 창출·축소, 임금 영향 분석·연구                                                                                                                                                                                                                                                                                              | BLS, DOC          |
| AI 인력 연구 허브(AI Workforce Research Hub) 설립으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정기 분석, 시나리오 기획, 정책 인사이트 제공                                                                                                                                                                                                                                            | DOL               |
| AI 관련 일자리 감축 대상자의 신속 재교육을 위해 재량 예산 활용 및 주정부 지침 발행                                                                                                                                                                                                                                                                                      | DOL               |
| 「인력 혁신 및 기회법」과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법」**을 기반으로 AI 주도 노동시장의 변화 속도와 복잡성에 미국 인력 시스템이 적응하기 위한 시범 사업 시행<br>*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WIOA): 기존 고용·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인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인력 개발 기본법<br>** Public Works and Economic Development Act(PWEDA):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인프라 정비, 고용 창출, 인력 훈련, 지역경제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법 | DOL, DOC          |

- **(차세대 제조업 지원)** AI를 통한 전 산업 혁신 실현을 위해 AI·로보틱스 등 차세대 기술 우선 투자로 제조·물류 혁신 및 안보 적용을 촉진하여 새로운 산업 르네상스 선도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p>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sup>①</sup>,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sup>②</sup>, 연구 보조금, 「반도체 및 과학법」<sup>③</sup>의 R&amp;D 프로그램,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sup>④</sup>, 「국방물자생산법」 제3편<sup>⑤</sup>, 기타 거래 권한<sup>⑥</sup> 등을 활용한 기초 및 변환 제조 기술 개발 및 확장에 투자</p> <p>①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amp;D) 및 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대표적 지원 프로그램</p> <p>②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STTR):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의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의 사업화 및 혁신적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연방정부 주도의 지원 프로그램</p> <p>③ CHIPS and Science Act: 미국 반도체 공급망 회복과 제조 능력 증대를 위해 제정되어 연구개발 연구, 인력 양성, 제조 보조금 등에 자금 지원</p> <p>④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연방정부 연구실과 민간·대학·지방정부 간의 기술이전과 혁신 촉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 최초의 기술이전 기본법</p> <p>⑤ 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물자와 기술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민간·연방 파트너에게 연구개발 및 생산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p> <p>⑥ Other Transaction Authority: 전통적 계약 절차를 우회해 방위·연구기관이 비상업적·비전통적 파트너와 혁신적 시제품 개발을 유연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부여한 계약 방식</p> | DOD, DOC, DOE, NSF |
| 산업계 및 정부 이해관계자 소집하여 미국 내 로보틱스 및 드론 제조 공급망 과제 파악                                                                                                                                                                                                                                                                                                                                                                                                                                                                                                                                                                                                                                                                                                                                                                                                                                                                                                 | DOC                |

- **(AI 기반 과학 투자)** AI 기반의 과학 혁신 가속화를 위해 과학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험 규모 확대를 지원하여, AI 예측 역량을 실질적 연구 성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 제공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공학, 생물학, 신경과학, 재료과학, 화학 분야의 자동화된 클라우드 기반 실험실 구축  | NSF, DOE, NIST |
| 장기 협약을 통해 중점 연구기관 등 AI 및 신기술 기반 연구조직 지원          | -              |
| 제안서 심사 시 이전 과학·공학 데이터셋 공개 실적을 반영해 고품질 데이터셋 공개 유도 | -              |
| 연방 지원 연구자는 AI 모델에 사용된 비독점·비민감 데이터셋 공개 의무화        | -              |

- **(세계적 데이터셋 구축)** AI의 경제적 잠재력을 실현하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대·최고 품질의 AI 학습용 과학 데이터셋 구축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AI 모델 훈련용 과학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최소 기준 권고안 마련                                                                                                                                                                                    | NSTC     |
| <p>「기밀정보보호 및 통계 효율성법」*에 따라 접근성 및 보안 기준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여, 연방 데이터 접근 장벽을 완화하고 사일로 해소</p> <p>*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 개인정보 보호와 통계 효율성 강화를 위해 통계자료 기밀 유지와 기관 간 제한적 데이터 공유를 법제화</p> | OMB      |
| AI 분석에 기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보안 컴퓨팅 환경 구축                                                                                                                                                                                 | NSF, DOE |
| 접근 제한 연방 데이터를 활용한 AI 응용 사례에 연방기관과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데이터서비스(NSDS) 시범 사업용 온라인 포털 구축                                                                                                                                        | NSF      |
| 미국 내 모든 생명체에 대한 유전체 정보 구축을 목표로 하는 유전체 서열 프로그램 신설 검토                                                                                                                                                                      | NSTC     |

- **(AI 과학 발전)** 미국이 AI 혁신의 선도적 개척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프런티어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집중 투자 단행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이론적·계산적·실험적 연구에 우선 투자하고 AI 역량을 혁신할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여 「국가 AI R&D 전략계획」에 반영 | OSTP  |

- **(AI 신뢰성 강화)** 설명 가능성 부족으로 고위험 분야에서 AI 활용이 제약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작동 원리와 결과 도출 과정의 근본적 이해를 위한 연구에 투자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AI 해석가능성, 제어 시스템, 공격적 견고성* 기술 개발 프로그램 추진<br>* Adversarial robustness : AI 시스템이 적대적 공격이나 입력 조작에도 정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 | DARPA              |
| 차기 「국가 AI R&D 전략계획」에 AI 해석가능성, 제어 시스템, 공격적 견고성 분야의 근본적 발전을 우선 과제로 반영                                              | OSTP               |
| 학계 최고 AI 인재들이 모이는 AI 해커톤 이니셔티브를 구성하여 시스템 투명성, 효과성, 사용 제어, 보안 취약성 테스트 추진                                           | DOD, DOE, DHS, NSF |

- **(AI 평가 생태계 구축)** 규제기관들의 AI 관련 법령 적용 시 AI 시스템의 성능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도구로서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연방기관이 AI 시스템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자료 발행            | DOC, NIST      |
| AI 모델 측정·평가 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                        | NIST, DOE, NSF |
| 연방 기관 및 연구계는 AI 평가 관련 경험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정기 회의 개최      | CAISI          |
| 농업·교통·의료 등 주요 분야에 실제 환경과 유사한 AI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개발·투자 | DOE, NSF       |
| AI 컨소시엄을 활용하여 확장·상호운용 가능한 AI 측정 기준 체계 마련           | DOC            |

- **(정부 AI 도입 가속화)** AI 도구를 활용해 내부 행정 절차를 자동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응성 높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AI 도입 관련 부처 간 조율 및 협력 기구로 최고AI책임자 협의회 공식화 및 협력 강화                                           | CAIOC |
| 부처 간 AI 전문 인력 교류 프로그램 도입                                                                    | OPM   |
| 연방정부 전반의 일관된 AI 조달을 위해 'AI 조달 톨박스'를 구축하고, 기관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AI 모델을 유연하게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GSA   |
| 첨단기술 이전 및 역량 공유 프로그램 시행                                                                     | GSA   |
| 모든 연방기관 소속 직원 대상 최첨단 언어모델 활용 도구 접근과 교육 제공 의무화                                               | -     |
| 고영향 서비스 제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AI 시범 도입·확산                                              | OMB   |

- **(국방 AI 촉진)** 국방부 고유 수요에 따른 특화 조치를 통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투·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여 글로벌 군사 우위 유지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국방부 내 AI 활용에 필요한 인재 및 기술 역량을 발굴하고, AI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AI 기반 기술의 효과적 활용 촉진        | DOD   |
| 국방부 내 AI 및 자율시스템을 실증하는 가상 시험장 설립을 위해 우선 기술, 지리, 보안, 자원 관련 요건 검토                   | DOD   |
| 주요 작전 및 지원 업무의 분류·평가·최적화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화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여 AI 기반 체계로 신속한 전환 추진     | DOD   |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등 민간 관련 기관과 국방부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 국방부의 컴퓨팅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 제도화  | DOD   |
|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대학의 기능을 강화하여 군사 AI 인재 양성 거점으로 활용하고, AI 개발, 인프라 관리 등 AI 특화 교육과정을 전공에 포함 | DOD   |

- **(AI 혁신 보호)** 미국의 AI 리더십 유지를 목표로, 첨단 AI 기술 확산과 국가안보 간 균형을 도모하고, 정부-산업계 협력을 통해 기업, 인재, 지식재산,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미국 주요 AI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악성 사이버 공격, 내부 위협 등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AI 혁신 적극 보호 | DOD, DHS, CAISI, IC |

- **(AI 생성 미디어 위협 대응)** AI 생성 미디어를 활용한 악의적 딥페이크 문제에 대응하여 법정에서 허위 증거물 채택 가능성 등 새로운 신증 위협을 반영한 법체계 마련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딥페이크 탐지 기술 평가 프로그램인 「법의학 증거 수호자(Guardians of Forensic Evidence)」*를 공식 지침으로 채택<br>* NIST가 발표('25.1)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은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평가하고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 및 벤치마크 제공               | NIST  |
| 연방 기관의 판단 절차에 딥페이크 증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연방 증거규칙」 제901조(c)항과 유사한 딥페이크 증거 표준 도입 검토<br>* AI를 통해 생성·변조된 증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인증 요소(메타데이터 검증, 생성 모델 공개 등)를 요구하는 별도 규정으로, '24년 상정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으며, 현재 재검토 중 | DOJ   |
| 연방 증거 규칙에 딥페이크 관련 조항 추가 시 공식 의견서 제출                                                                                                                                                           | OLP   |

## 2. 전략축 2 : 미국 AI 인프라 구축

### [ 중점 정책 방향 ]

- AI 인프라 신속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절차 개선 중심의 제도 혁신
-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기반 마련
-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자립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AI 인프라 확산을 뒷받침할 고급 인재의 확보·유치 체계적 강화
- 복합적 위협에 대비한 AI 기반 인프라의 보안성 및 회복력 제고

- **(인허가 간소화)** AI 개발 및 활용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반도체 제조시설, 에너지 인프라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 추진으로 미국의 AI 기술 우위 유지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p>데이터센터 구축 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국가환경정책법」*상 제외 항목을 신설하고, 타 기관 기존 제외 규정을 채택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p> <p>*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 :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 및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환경 기본법</p>                                                                                                                                  | -     |
| <p>「미국의 육상교통 개선법」에 따라 데이터센터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FAST-41* 신속 허가 절차 확대</p> <p>*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Title 41 : 미국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인허가 및 환경심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연방정부 차원의 '패스트트랙' 제도</p>                                                                                                                                  | -     |
| <p>데이터센터에 대해 「연방수질오염관리법」 제404조* 전국 인허가** 도입 검토 및 착공 전 통보(Pre-Construction Notification) 면제, 현대식 AI 데이터센터 규모에 적합한 개발 부지 확보 보장</p> <p>* Clean Water Act : 하천·습지 등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사업 시행 전, 사전 통지 및 연방 육군공병단의 허가를 요구</p> <p>** Nationwide Permit(NWP) : 개별 심사 없이 일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전역에서 통용되는 간소화 인허가</p>                             | -     |
| <p>「청정대기법」*, 「연방수질오염관리법」, 「종합환경대응 배상 책임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공포된 규제의 간소화를 통해 환경 인허가 절차 신속화</p> <p>* Clean Air Act :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 규제 법률로, 대기질 기준 설정, 배출허용치, 자동차 배출규제 등과 관련한 규제 내용 포함</p> <p>**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CERCLA) : 유해 폐기물 등 오염된 부지의 정화·복원을 위해 책임자를 규명하고 보상 및 정화 비용 책임 부과</p> | -     |
| 연방정부 보유 토지를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건설에 활용하고, 대규모 개발에 적합한 부지 발굴                                                                                                                                                                                                                                                                                  | -     |
| 적성국의 민감 정보 삽입 차단을 위한 보안 방벽 유지 및 미국산 제품 기반 AI 컴퓨팅 스택 구축과 에너지·통신 인프라의 외국 정보통신기술 활용 완전 배제                                                                                                                                                                                                                                                 | -     |
| 에너지부의 PermitAI 프로젝트* 참여 기관 확대를 통한 AI 기반 환경 검토 절차 가속화 및 개선                                                                                                                                                                                                                                                                              | -     |
| * 인프라 관련 방대한 환경심사·허가 문서를 AI로 자동화하여 절차를 대폭 단축·효율화하는 국가 과제                                                                                                                                                                                                                                                                               | -     |

- **(전력망 개발)** 미래의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집약적 산업 지원을 위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전력 인프라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전력망 강화·확장을 위한 종합 전략 수립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자원 적정성에 대한 국가 표준 준수를 요구하고, 중요 발전 자원의 조기 폐기 방지 및 기존 예비 전력원을 활용한 전력망 신뢰성 강화                           | -     |
| 첨단 전력망 관리 기술 및 전력선 업그레이드로 송전 효율성·신뢰성을 향상하고, 대규모 전력 소비자에 대한 자율적 사용량 조절 방식 도입 검토                                    | -     |
| 출력 조절가능한 전원 자원의 전력망 연결 우선 추진, 지열·핵분열·핵융합 등 첨단 에너지원의 수용 확대, 전력망 안정성 목표에 맞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발전 투자가 실제 수요를 반영한 발전 투자 유도 | -     |
| AI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안정화, 자원 최적화, 미래형 전력망 확장을 아우르는 전략 수립                                             | -     |

- **(반도체 제조 역량 재건)** 미국 내 반도체 생산력 확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리더십 강화 및 외국 경쟁국의 공급망 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CHIPS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의 투자 수익률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정책 요건 제거를 통한 규제 간소화 및 효율화 추진 | CHIPS Program Office |
| 반도체 보조금 및 연구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반도체 제조 공정에 첨단 AI 도구 통합                                   | DOC                  |

- **(고보안 데이터센터 구축)** 원시 정보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AI 시스템의 활용 확장을 위해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정보기관용 데이터센터 구축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산업계 및 연구센터와 협력하여 고보안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새로운 기술 표준 수립   | DOD, IC, NSC, NIST, CAISI |
| 확장가능하면서도 안전한 AI 작업 환경 지원을 위해 정부 기관의 기밀 컴퓨팅 환경 도입 | -                         |

- **(숙련 인력 양성)** 핵심 직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AI 인프라 우선순위 직종을 파악하고, 최신 역량 표준 개발과 산업 주도의 직업훈련·견습·교육 프로그램 확대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AI 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핵심 직종을 파악하고 각 직종의 기술 프레임워크와 역량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 수립                        | DOL, DOC               |
| AI 인프라 핵심 직무 대상 산업 주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고용주-교육 파트너의 공동 교육 개발을 통해 취업 연계형 인력 양성과 현직자 재교육 모델 발굴 | DOL, DOE, ED, NSF, DOC |
| 중고등학생 대상 AI 인프라 직종 조기 진로 탐색 및 예비 견습 프로그램 확대로 직종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고용주 수요를 반영한 직업 진입 경로 제공          | DOL, ED, NSF           |
| 주(州)·지역 진로·기술 교육(CTE) 프로그램에 AI 인프라 직업 맞춤형 커리큘럼 개선, 수요 연계 강화 등 교육과정 업데이트 지침 제공                 | OCTAE                  |

| 정책 권고사항 (계속)                                                                                                                                        | 담당 조직 |
|-----------------------------------------------------------------------------------------------------------------------------------------------------|-------|
| AI 인프라 관련 필수 직종에 대한 등록 견습 프로그램* 확대 및 신규 프로그램 신속 개설, 중개 기관 지원,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한 기업 참여 활성화<br>* Register Apprenticeship: 정부 인증 일·학습 병행 훈련 프로그램 | DOL   |
| 학부생, 대학원, 박사후 연구원 및 교육자의 실습 중심 연구·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인력 양성과 기존 인력의 AI 핵심 역할 전환 지원                                                            | DOE   |

- **(인프라 사이버보안 강화)** AI 기반 사이버 방어 도구 도입으로 새로운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설계 단계부터 보안 내재화 및 변화탐지, 데이터 오염·공격 경고 체계 구축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미국 주요 인프라 부문 전반에 걸쳐 AI 보안 위협 정보 및 첩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AI 정보 공유 및 분석 센터(AI-ISAC)' 설립 | DHS   |
| AI 관련 취약점 및 위협 대응 지침을 만들어 민간 부문에 제공                                             | DHS   |
| 기존 사이버 취약점 공유체계를 활용하여 연방기관 내 확인된 AI 취약점을 민간과 공유                                 | -     |

- **(AI 안전 설계 촉진)** 국가 보안 용도의 AI 시스템을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AI 보증(AI Assurance) 분야를 발전시키고 복원력 있고 안전한 AI 개발·배포 촉진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국방부의 책임 있는 AI 및 생성형 AI 프레임워크, 로드맵, 툴킷 지속 개선                                                                                                                                  | DOD   |
|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공동체 지침」 505호* 하에 AI 보증에 관한 정보공동체 표준 발행<br>* Intelligence Community Directive 505 on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 정보공동체에서 AI의 개발·도입·운용과 관련된 관리·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정책 문서 | ODNI  |

- **(AI 사고 대응)** AI 시스템 장애 시 핵심 서비스·인프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사고 대응 지침과 모범사례 AI 관련 사고 대응 절차 포함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사고 대응팀의 대응 프레임워크, 모범사례, 대응 기술 마련 시 AI 관련 내용 포함                                                       | NIST, CAISI    |
| 「사이버보안 사고 및 취약성 대응 실행계획서」 내에 AI 시스템 고려 사항과 기관 간 협의 절차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연방기관은 이에 따라 자체 대응계획 갱신            | CISA           |
| 행정명령 제14306호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지속 및 기존 행정명령(제13694호 및 제14144호) 개정」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 AI 취약점 정보의 책임 있는 공유 장려 | DOD, DHS, ODNI |

### 3. 전략축 3 :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

#### [ 중점 정책 방향 ]

- 글로벌 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및 기술 수출 전략 강화
- 첨단 AI 기술의 전략적 통제를 통한 적대국 확산 차단 및 기술 주권 수호
- 동맹국과의 정책 정합성 확보를 통한 국제 규범 및 평가 체계의 공동 형성
-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기준 정립 및 안정성 중심의 활용 기반 마련

- **(미국산 AI 수출)** AI에 대한 국제 수요를 충족하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경쟁국 기술 의존을 막기 위해 AI 기술 전 범위 스택(HW, SW,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수출 활성화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I 스택 수출 패키지 실행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여 미국의 보안 요건과 표준에 따라 구성된 계약 추진 | DOC   |

- **(중국 영향력 견제)**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규제나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표준 확산을 차단하는 국제 AI 거버넌스 추진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국제 외교 및 표준 기구에서 미국의 입지를 활용해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여 권위주의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국제 AI 거버넌스 강화 | DOS, DOC |

- **(AI 컴퓨팅 수출통제)** 지정학적 경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 적성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첨단 AI 컴퓨팅 자원 수출통제 집행 강화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AI 칩 탑재 위치추적기 활용 방안 검토 및 우려 국가에 칩 유출 방지 조치 시행                                                                                                                                           | DOC, OSTP, NSC |
| 칩 수출통제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AI 기술 발전 동향 모니터링과 우회 수출을 포함한 유출 우려국 감시체계 마련, 수출통제관* 비주재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가능<br>* Export control officer: 상무부 소속으로,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나 제재 회피 시도를 감시·단속하기 위해 해외에 파견되는 전문가 | DOC            |

-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반도체 기술 우위 유지 및 국가안보 위협국의 기술 오용 차단을 위한 수출통제 사각지대 해소 및 집행 절차 강화

| 정책 권고사항                                                                         | 담당 조직 |
|---------------------------------------------------------------------------------|-------|
| 반도체 제조 하위 시스템*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 도입<br>*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소재 등 핵심 요소 기술 | DOC   |

- **(글로벌 정합성 확보)** 민감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불이행 시 외국산직접생산규칙 (FDPR)\*·보복관세 등의 수단을 통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준수 유도

\* Foreign Direct Product Rule: 「수출관리규정」의 한 조항으로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생산 국가에 상관없이 미국 정부가 수출·재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

| 정책 권고사항                                                                                | 담당조직     |
|----------------------------------------------------------------------------------------|----------|
| 적성국 및 우려 기관으로부터의 위험 완화를 위해 기초연구 및 고등교육 분야를 포함한 기술 보호 조치 개발·이행·정보 공유                    | DOC, DOS |
| 주요 동맹국에 AI 보호 체계와 수출통제 채택을 유도하고 민감 AI 기술이 적성국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AI 글로벌 동맹을 위한 기술 외교 전략계획 수립 | DOS      |
| 기존의 다자조약 기구 의존을 지양하고 미국 AI 기술 스택에 대한 복수 국가 간의 통제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 확대                        | -        |
| 동맹국들의 미국 수출통제 채택과 공동의 통제 조치 개발 추진, 적성국의 동맹국 방산 산업 공급 및 공급업체에 대한 지배권 확보 차단              | DOC, DOD |

- **(프런티어 AI 모델 위험 평가)** 미국 주도로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CBRNE) 및 사이버보안 분야 등에서 최첨단 AI 모델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평가하는 체계 구축

| 정책 권고사항                                                                         | 담당조직                      |
|---------------------------------------------------------------------------------|---------------------------|
|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 및 사이버 위험 분야 전문 기관 및 AI 개발자들과 협력하여 프런티어 AI 시스템의 국가안보 위험 평가 공동 수행 | CAISI                     |
| 잠재적 보안 취약점 및 악의적 외국 세력 개입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분석 수행                                     | CAISI                     |
| 최첨단 AI 시스템 평가 및 분석 지속 수행을 위해 연방기관 내에 선도적 AI 연구자 채용                              | NIST, CAISI, DOE, DOD, IC |
| 연방기관 및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국가안보 관련 AI 평가 체계 수립·운영·갱신                                    | CAISI                     |

- **(바이오 안보 투자)** AI 활용 생물학 연구의 잠재적 위험 대응을 위해 악의적 행위자 선별 체계와 검증 도구·인프라를 구축하고 향후 동맹국·파트너국과 협력하여 국제 기준으로 채택 추진

| 정책 권고사항                                                                  | 담당조직  |
|--------------------------------------------------------------------------|-------|
| 연방정부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견고한 핵산 서열·구매자 신원 확인 절차를 갖춘 합성 도구·제공업체 사용을 의무화 | -     |
| 핵산 합성 공급자 간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기성 및 악의적 구매자 선별                           | OSTP  |
| 연방기관 및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국가안보 관련 AI 평가 체계 수립·운영·갱신                             | CAISI |

# 3장 |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1. 평가

### 1-1 지지 의견 및 긍정 평가<sup>1)</sup>

-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 주도권 확보)** 업계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중국이 '17년부터 일관된 AI 국가 전략을 추진해 온 상황에서 이번 계획을 달 착륙에 비견될 역사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범국가적 결집의 필요성 강조(American Edge Project)
  - AI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 기술 수출 등 전방위적 수단을 동원한 종합 전략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평가(Center for Data Innovation)
  - 현재 상황을 중국과 AI 패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으로 진단하며, 미국의 AI 리더십이 국가의 경제력과 안보 역량과 직결된다고 분석(Meta)
- **(규제 장벽 제거 및 혁신 촉진)** 정부 주도의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핵심 기조로 삼은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 환영
  - 바이든 행정부의 중앙집권적 AI 통제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관료가 아닌 미국 국민의 창의성을 혁신 동력으로 삼으려는 방향 전환을 높이 평가(Americans for Prosperity)
  - 바이든 및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이 완전히 상반된 철학에 기반한다고 규정하며,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되 개입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지지(NetChoice)
  - 연방거래위원회 규제 재검토 조항을 강조하며, AI 기술에 대한 소비자 접근을 저해하던 법적 장벽 해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평가(Consumer Choice Center)
- **(AI 인프라 및 에너지 투자)**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 체계의 확충을 미국의 기술 자립도 제고와 전략적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
  - AI 발전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기반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기반 조성 노력에 공감(Chevron Corporation)
  -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이 단순한 경제 투자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한다고 진단하며, 계획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Data Center Coalition의 Josh Levi)
  - 미국 내 AI 인프라 자립 기반 구축이 기술 독립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평가(Dell Technologies)

1) 본 항 '지지 의견 및 긍정 평가'은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AI 실행계획」 관련 의견(["Wide Acclaim for President Trump's Visionary AI Action Plan"](#))을 축약한 것으로, 의견 제시자의 성명을 생략하고 소속만 표기.

-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AI 시대에 부합하는 숙련 인력 양성을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설정한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접근으로 평가
  - 산업계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력이 요구하는 역량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려는 정책적 지원을 높이 인정(American Society of Association Executives)
  - 이번 계획이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AI 기반 경제체제 내에서 미국 근로자의 경쟁 우위 확보에 중점을 둔다고 분석(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 인력 개발과 AI 리터러시를 물리적 인프라와 동등한 수준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한 점을 혁신적인 정책 관점으로 인식(Software &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 **(정부 현대화 및 AI 도입)** 공공부문의 AI 활용 확대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실용적 전략으로 평가
  - 정부 조달 시스템의 현대화가 공공기관의 최신 AI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고, AI 관련 민간 시장의 전반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Business Software Alliance)
  -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동시에 AI를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핵심 전략이라고 분석(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 연방정부의 선도적 AI 활용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미국 AI 경쟁력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상징적 조치로 작용한다고 평가(Workday)
- **(제조업 및 산업 AI 적용)** 전통 제조업과 첨단 AI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 가속화가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
  - 제조업계가 머신 비전, 로봇공학, 디지털트윈 등 AI 기반 기술을 적극 도입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온 실적을 근거로 계획의 현실성을 높이 평가(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실물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창조가 미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정립할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Siemens USA)
  - AI 기술 우위 유지가 미국 제조업의 지속 성장과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American Beverage)
- **(국제 협력 및 AI 수출 촉진)** 미국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해석
  -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한 AI 시스템을 미국 기업 주도로 안전하게 개발하고 전세계로 보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Anthropic)
  - 미국 AI 기술 스택의 수출 촉진이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 기술 혁신의 글로벌 표준화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Arm)
  - 동맹국 및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AI 기술 수출 전략이 미국의 국제 AI 리더십을 공고히 할 핵심 외교 전략이라고 분석(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 1-2 쟁점 및 우려 사항

- **(이념적 편향 제거 한계)** AI 모델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편향이 확인된 모델을 연방 조달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 제기
  - AI 시스템은 훈련 데이터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편향을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특정 현실 인식을 강제하거나 사실 해석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sup>3)</sup>
  - 편향성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며 논쟁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해당 기준을 근거로 정부가 특정 기업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제재할 경우 조달 절차의 공정성 훼손 가능<sup>4)</sup>
- **(주정부 권한 훼손)** 주(州)정부의 자율적인 AI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제한하려는 계획은 입법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연방주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적 쟁점 존재
  - 상원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서 주정부의 AI 규제 유예 조항을 99 對 1의 압도적 표차에 따라 삭제했으며, 다수의 공화당 주지사도 연방 차원의 일괄적 규제 제한에 반대 견해를 공식적으로 표명<sup>5)</sup>
    - \*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대표 입법 과제로, 연방 차원의 대규모 세금 감면과 국방·에너지·기반시설 중심의 재정지출 확대를 하나의 예산 조정법에 담았으며, '25년 7월 4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
  - 「AI 실행계획」은 연방통신위원회가 각 주의 AI 관련 법률을 심사 및 무효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주에 AI 관련 연방 자금 지원을 차단함으로써 주정부 권한 훼손<sup>6)</sup>
- **(AI 안전장치 부재)**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AI 안전 규제를 대거 철폐하고, 과도한 규제 완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운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안전장치 부재 문제를 강하게 제기
  -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정부가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AI 기술의 확산에 '녹색불'을 켜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잠재적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sup>7)</sup>
  - 민주주의·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는 이번 계획이 기술 혁신 촉진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지적<sup>8)</sup>
- **(인프라 구축 방안 모순)** AI 인프라 확충을 명분으로 대규모 전력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재생에너지 기반 송전 인프라 지원을 축소하는 등 정책적 일관성 부족<sup>9)</sup>
  - 중국 수준의 발전 용량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재생에너지 송전망 핵심 사업인 '그레인벨트 익스프레스'에 대한 연방 대출 보증을 철회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모순을 노정<sup>10)</sup>
  - 특히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미국의 전력 수요가 '30년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탄소 집약적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확장 전략은 정책적 일관성 결여<sup>11)</sup>
- **(빅테크 이익 추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온 주요 테크 기업 인사들의 영향력이 발휘되어 빅테크 중심의 산업 논리가 계획에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
  -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오라클 등 주요 기업들이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AI 생태계 독점 심화에 대한 우려 확대<sup>12)</sup>

- 아울러 환경 규제 완화와 연방 토지 이용 허용은 빅테크 기업에 막대한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전기요금 상승 및 환경 악화 등의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음<sup>13)</sup>
- 다수 시민단체는 해당 계획이 공공 이익보다 산업 이익을 앞세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시민·근로자·지역사회 중심의 「시민을 위한 AI 실행계획(People's AI Action Plan)」 필요성 강조<sup>14)</sup>
- **(미국의 국제적 고립)** 트럼프 행정부가 AI 거버넌스에서 글로벌 질서의 설계자 역할을 자임하며 주도권 확보를 천명했으나, 일방주의적 접근은 오히려 미국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
  - 동맹국들에 대해 자국 중심의 규범을 따르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 데이터 투명성, 윤리적 AI 활용을 중시해 온 동맹국과의 가치 충돌 불가피<sup>15)</sup>
  - 특히, 전통적 파트너 및 다자간 기구들과의 협력 기반이 약화될 경우 미국의 AI 리더십은 국제 신뢰보다는 시장 지배력에 기반한 일방적 패권으로 인식될 위험 존재<sup>16)</sup>
  - 이처럼 미국이 자국 중심 규범을 강요하는 가운데, 중국은 7월 26일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대안적 국제질서 구축에 나선 상황<sup>17)</sup>

< \* 참고 : 중국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 >

- **(발표)** '25년 7월 26일 개최된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리관 총리가 글로벌 AI 협력 조직 구상과 함께 발표
- **(목적)** 포용성, 개방성, 지속가능성, 공정성, 안정성, 신뢰성을 갖춘 모두를 위한 디지털 및 지능형 미래 창조

| 13대 실행 과제                  |                          |
|----------------------------|--------------------------|
| 1 AI 기획의 공동 활용             | 2 AI 혁신 발전 촉진            |
| 3 AI의 모든 산업 분야 활용 추진       | 4 디지털 기초 인프라 건설 가속화      |
| 5 다원적 개방 혁신 생태계 조성         | 6 우수한 데이터 공급 적극 추진       |
| 7 에너지 환경 문제 효과적 대응         | 8 표준 및 규범 합의 촉진          |
| 9 공공부문의 선도적 배치 및 응용        | 10 AI 안전 거버넌스 개선         |
| 11 「글로벌 디지털 협약」 공동 이행      | 12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 13 다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모델 구축 |                          |

- **(함의)** 미국이 「AI 실행계획」에서 규제 철폐 및 민간 주도를 통한 AI 패권 확보에 집중한 반면, 중국은 이번 계획을 통해 공정성, 안전성, 보편적 확산을 강조한 포용적 거버넌스 강조
  - 모든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 체계에 대응하는 대안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AI 질서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를 드러냄

- **(정책 실행력 부족)** 계획의 방향성은 명확하나, 주관 부처 미지정, 이행 일정 부재, 성과 지표 부재 등 세부 실행 방안이 부족으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sup>18)</sup>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산 삭감 및 인력 감축 기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 동맹국과의 협력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정책 추진 기반이 전체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sup>19)</sup>
  - 한편, AI 편향성 제거 요건 및 환경 규제 완화 등의 조치는 현행 법률과 상충할 소지가 있어, 관련 소송과 법적 분쟁이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과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sup>20)</sup>

## 2. 정책적 시사점

- **(AI 정책 전략적 재설계)** 미국 AI 정책 기조가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될 경우,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책 중 정합성이 낮은 영역이 혁신 저해 요소로 간주되어 협력 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기술 주권 확보 등 한국 AI 정책의 핵심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한미 협력 및 국제 협상 과정에서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정책 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 역량 확보
  - 미국의 규범 형성 초기 단계에서 기존 및 신규 기술협력 채널을 활용해 한국의 정책 입장을 개진하는 동시에, 미국의 집권당 및 AI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 마련
- **(기술 주권 對 대미 협력 균형 모색)** 오픈소스 AI 모델 장려 정책은 한국 스타트업의 고성능 AI 접근성을 높이는 반면, 미국 생태계가 글로벌 표준이 될 경우 한국의 독자 모델 개발 역량 위축
  - 미국 주도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용하되, 특화 분야(한국어 처리, K-콘텐츠 등)에서 차별화된 독자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병행 필요
  - 미국의 AI 기술 표준과 평가 체계 선점에 대응해 한국의 강점 분야에서의 테스트베드 실증과 국제표준을 공동 제안하여 상호보완적 영향력 발휘
  - 소버린AI 생태계 구축과 미국 AI 풀스택 수출 정책 간 상충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정책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는 전략적 소통 지속 추진
-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및 기술 보호 체계 강화)** 미국의 AI 칩 위치 확인 기능 탑재와 우회 수출 감시체계 강화로 한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과 현지 생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
  - 반도체 제조 하위 시스템까지 수출통제가 확대될 경우,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및 장비·소재 업체의 대중 수출에 실질적 피해 불가피
  - 반도체 공급망의 전략적 다변화 추진과 동시에, 미국과의 정책 조율에서 예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기여 및 기술안보 협력 등 다각적인 수단을 통한 외교 협상력 강화
  - AI 핵심 기술·인재·데이터를 둘러싼 보안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국방·산업·정보보안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공공-민간 보안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 **(전략적 국제 관계 추진)** 미·중 간 AI 거버넌스 경쟁 심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술 중립적 분야에서 양국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중재적 역할 모색이 요구됨
  - 미국이 AI 안전성, 투명성, 편향성 제거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선점을 본격화할 전망임에 따라 미국 표준 적용에 대비한 실무 대응체계 구축
  - 동맹국으로서의 신뢰 확보, 미국 표준 적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자체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AI 기술 개발 단계부터 보안 및 안전 내재화 원칙 적용 검토
  - 미·중 간 AI 거버넌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AI 표준 및 성능 평가 등 기술적 현안에 집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해 양국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 모색 필요

# 부록1 | 「AI 실행계획」에 대한 공개 의견

## [ 민간 기업 의견 주요 내용 ]

| 조직 구분               |                    | 주요 내용                                                                                                                                                                                                                                                                                                                                                            |
|---------------------|--------------------|------------------------------------------------------------------------------------------------------------------------------------------------------------------------------------------------------------------------------------------------------------------------------------------------------------------------------------------------------------------|
| AI 개발<br>·<br>공급 기업 | 프런티어<br>모델<br>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전용 전력 인프라 구축)</b> AI 산업 성장에 대응해 전력 공급 역량을 대폭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여 대규모 AI 모델 훈련을 위한 인프라 강화</li> <li>▪ <b>(저작권 공정사용 보장)</b> AI 학습 데이터 접근권 보장을 위해 공정사용 원칙을 적용하고, 훈련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li> <li>▪ <b>(국가안보 AI 역량 구축)</b> 프런티어 AI 모델의 국가안보 영향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통제 강화와 연방정부의 AI 테스트 역량 확대를 기술 우위 확보</li> </ul> |
|                     | AI<br>전문<br>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인재 확보)</b>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이민 비자 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외국 출신 AI 인재의 창업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li> <li>▪ <b>(정부 조달 체계 현대화)</b> 연방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절차(FedRAMP) 간소화, 승인 기간 단축, 비 전통적 기업의 조달 참여 확대를 통해 혁신적 AI 솔루션 도입 촉진</li> <li>▪ <b>(중소기업 지원 강화)</b> 중소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정규 제도로 전환하고, 대기업 중심 조달 구조를 개선하여 스타트업에 우선 조달 기회 제공</li> </ul>  |
|                     | AI<br>보안·<br>거버넌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보안 표준화)</b> 기존 사이버보안 표준을 참고하여 확장가능한 AI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점 공개 시스템 및 모델 점검 절차 도입</li> <li>▪ <b>(AI 검증 체계 구축)</b> 공공 인증 기관을 중심으로 AI 시스템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검증된 시스템에 대해 연방 조달 시 우선권 부여</li> </ul>                                                                                                                            |
|                     | AI<br>플랫폼·<br>도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오픈소스 AI 생태계 강화)</b> 오픈소스 AI 모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가AI연구지원 확대와 더불어 고품질 데이터셋 접근성 개선</li> <li>▪ <b>(클라우드 데이터 정책 개선)</b>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전송 수수료를 금지하고, AI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정사용 기준 확립</li> </ul>                                                                                                                              |
|                     | AI<br>컨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전문인력 양성)</b> K-12부터 대학까지 AI 교육을 통합하고,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지원하며, 연방 차원의 AI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li> <li>▪ <b>(적응형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b>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결과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기술 중립적 법률을 활용해 불필요한 규제 장벽 제거</li> </ul>                                                                                                       |
| AI 인프라<br>제공<br>기업  | 네트워크·<br>통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광섬유 인프라 구축 가속화)</b> AI 데이터센터 연결을 위한 광섬유 배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범위를 확대</li> <li>▪ <b>(AI 전용 통신망 구축 지원)</b> 농촌 지역을 포함한 중간 단계 광섬유망(AI 전용 통신망)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광대역 예산 프로그램 재배정</li> </ul>                                                                                                                  |
|                     | 데이터<br>센터·<br>클라우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전력 인프라 현대화)</b>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송전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전력 공급 전략 지원</li> <li>▪ <b>(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b> AI 데이터센터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 하고, 현장 내 소형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연방 대출 보증 제공</li> </ul>                                                                                      |
|                     | 반도체·<br>하드웨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반도체 투자 세제 확대)</b> 첨단 제조 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반도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AI 반도체 설계·제조 중심으로 집중 지원</li> <li>▪ <b>(AI 하드웨어 다양화)</b> 특정 기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AI 하드웨어 인프라를 확대 하고, 관련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1,0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펀드 조성</li> </ul>                                                                                              |
|                     | 전력·<br>에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력망 허가 절차 단축)</b> 송전망 확장 허가 절차를 현행 10~15년에서 대폭 단축하고, 실시간 부하 예측 기술을 신속히 도입해 수개월 내 전력망 용량 확보</li> <li>▪ <b>(차세대 원자력 기술 촉진)</b>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배치를 가속화하고, 핵융합 에너지를 국가 안보 차원의 우선순위로 지정하며, 원자력 규제 절차 완화 추진</li> </ul>                                                                                                   |

| 조직 구분          |        | 주요 내용                                                                                                                                                                                                                                                                                                                                                                                                                                                                            |
|----------------|--------|----------------------------------------------------------------------------------------------------------------------------------------------------------------------------------------------------------------------------------------------------------------------------------------------------------------------------------------------------------------------------------------------------------------------------------------------------------------------------------|
| AI<br>활용<br>기업 | 금융·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존 금융 규제 체계 활용)</b> AI에 특화된 신규 규제 도입보다는 기존 금융 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대응하고, 「신용기회균등법」의 체계적 접근 방식을 AI 모델에 확대 적용</li> <li>▪ <b>(위험 기반 규제)</b> 금융 산업 전반을 일괄적으로 고위험으로 분류하지 않고, 산업별·사례별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며, AI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책임 규정</li> <li>▪ <b>(금융 데이터 접근성 개선)</b> 금융 소비자의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포괄적 금융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체계 현대화</li> </ul>                                                                                               |
|                | 기후·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기상 예측 경쟁력 강화)</b> 글로벌 수준의 AI 기상 예측 모델 구축을 위한 정부 주도 대규모 프로그램 추진 및 민간 기업과의 신속한 파트너십 구축</li> <li>▪ <b>(환경 AI 규제 샌드박스)</b> 위성 이미지 분석 등 환경 분야 AI의 신속한 조달 프로세스 및 해양 AI 기술 테스트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li> </ul>                                                                                                                                                                                                                                |
|                | 보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기반 사이버보안 우선 도입)</b> 연방정부 전반에서 AI 기반 사이버보안 솔루션 우선 사용을 의무화 하고, AI 네이티브 사이버보안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li> <li>▪ <b>(AI 레드팀 테스트 의무화)</b> 중요 인프라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배포 전 검증 및 정기적 레드팀 테스트 의무화</li> </ul>                                                                                                                                                                                                                           |
|                | 유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근로자 친화적 AI 정책 추진)</b> AI를 근로자 대체 도구가 아닌 노동력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재교육 프로그램 추진</li> <li>▪ <b>(통일된 AI 표준 도입)</b> 국립표준기술연구소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와 같은 통일된 AI 표준을 도입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위험 기반의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li> </ul>                                                                                                                                                                                                       |
|                | 의료·보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료 규제 현대화)</b> 기존 의료 규제를 AI 기술 발전에 맞게 개정하고, 의사만 수행가능한 것으로 제한된 의료 업무에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AI 기술 사용을 허용</li> <li>▪ <b>(의료 AI 위험 기반 규제)</b> 행정용 AI와 임상용 AI를 구분하는 위험도 기반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 행정 업무에는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임상 도구에는 엄격한 검증 적용</li> <li>▪ <b>(AI 의료 보험 급여 체계)</b> AI 기반 진단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보험 급여 기준 마련 및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내 AI 기반 의료 솔루션 전용 승인 프로그램 신설</li> </ul>                                                                                        |
|                | 전문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부 AI 도입 확대)</b> 사기 탐지, 시민 서비스 플랫폼, 문서 지능화 등 고영향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AI 도입을 추진하고, 조달·보안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li> <li>▪ <b>(중소기업 AI 접근성 강화)</b>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AI 도입 지원 체계 구축,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기술 접근성 개선, 단계적 규제 적용 등으로 시장 진입 장벽 완화</li> </ul>                                                                                                                                                                                                     |
|                | 정보통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방 차원의 규제 통합)</b> 700개 이상의 주별 AI 관련 법안으로 인한 규제 복잡성과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 주도의 통합된 AI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li> <li>▪ <b>(AI 기반 보안 인프라 강화)</b> 딥페이크와 사기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신원 확인 기술 및 디지털 인증 표준을 도입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조성</li> </ul>                                                                                                                                                                                                               |
|                | 제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기반 제조업 혁신)</b> AI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제조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방 산업과 민간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공급망 자립도 강화</li> <li>▪ <b>(국가 로봇공학 발전 전략)</b> 국가 차원의 로봇공학 전략을 수립하고, 로봇 기술 확산을 위한 세제 지원 및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백악관 내 전담 조직 신설</li> </ul>                                                                                                                                                                                                                          |
| 창작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훈련 데이터 보상 의무화)</b>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대한 창작자 보상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창작물 무단 사용 및 허가 없는 AI 학습 방지</li> <li>▪ <b>(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b> AI 생성 콘텐츠와 인간 창작물 간 구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창작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체계 강화 및 AI 기업의 무단 데이터 수집 차단</li> <li>▪ <b>(거부권 보장)</b>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AI 훈련 데이터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확한 거부권 행사 메커니즘 제공 및 창작자의 동의 없는 AI 훈련 금지</li> <li>▪ <b>(공정한 라이선싱 체계 마련)</b> AI 기업과 창작자 간 공정한 라이선싱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금전적 보상 중심의 합리적 지불 체계 확립</li> </ul> |

[ 협회 의견 주요 내용 ]

| 조직 구분                        |              | 주요 내용                                                                                                                                                                                                                                                                                                                                                                                                          |
|------------------------------|--------------|----------------------------------------------------------------------------------------------------------------------------------------------------------------------------------------------------------------------------------------------------------------------------------------------------------------------------------------------------------------------------------------------------------------|
| AI 개발<br>·<br>공급<br>기업<br>협회 | AI 기술<br>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합 규제 체계 채택)</b> 연방 차원의 통일된 AI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자발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가벼운 규제 방식 채택</li> <li>▪ <b>(데이터 접근권 보장)</b> 공개 저작물에 대한 AI 훈련을 공정이용으로 보호하고 저작권법의 유연성을 유지하여 데이터 접근 제한 완화</li> <li>▪ <b>(정부 AI 도입 촉진)</b> 연방 기관의 AI 도입 촉진을 위해 「연방조달규정」 개혁 및 조달 프로세스 간소화를 추진하고, 혁신적 스타트업과 민간 기업의 정부 AI 도입 참여 확대</li> </ul>                                                   |
|                              | 하드웨어·<br>인프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력 인프라 확충)</b> 전력망 현대화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개선, 전력 인허가 절차 개혁, 송전망 상호연결 개선,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의 핵심 에너지원 인정 등 전력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li> <li>▪ <b>(통신 인프라 강화)</b>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연방통신위원회에 주파수 경매 권한을 재부여하고, 전국 광섬유 인터넷망 구축과 데이터센터 전용 초고속 통신망 확충 추진</li> <li>▪ <b>(반도체 산업 지원)</b> CHIPS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반도체 제조업을 재강화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 및 확대하며, 균형 잡힌 수출통제와 전략적 무역정책 유지</li> </ul>                 |
|                              | 표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표준 개발)</b> AI 전용 인프라 구축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표준 개발을 통해 미국의 AI 우위를 확보하고, AI 기술 표준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계획 수립 시 핵심 내용으로 포함</li> <li>▪ <b>(표준화 영역 확대)</b> 데이터 품질, 신뢰성, 관리 체계, 성능 테스트 등 핵심 영역에서 AI 표준화 노력을 지속하고,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에 적극 참여</li> </ul>                                                                                                                                |
| AI 활용<br>산업<br>협회            | 국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상용 AI 솔루션 조달)</b> 정부의 AI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상용 AI 솔루션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정부 시스템 운영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AI 도입 장벽을 제거</li> <li>▪ <b>(공공-민간 파트너십 장려)</b> AI 모델과 도구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국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국가보안기관과 소규모 신흥 기술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li> </ul>                                                                                                                                         |
|                              | 금융·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존 규제 체계 활용)</b> AI에 특화된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존의 기술 중립적 규제 프레임워크 활용 하고, 소비자 금융 보호 및 차별금지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규제적 접근방식 채택</li> <li>▪ <b>(위험 기반 접근)</b> 은행의 기존 모델 위험관리 의무와 중복되지 않는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AI 모델 성능 문서나 인증 프로그램 같은 자발적 표준 채택을 통한 업계 간 협력 장려</li> </ul>                                                                                                               |
|                              | 유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활용업체 중심 정책 추진)</b> AI 개발자보다는 소매업 등 실제 활용 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유통업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 채택</li> <li>▪ <b>(AI 활용 지원)</b> 공급망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활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위한 AI 교육 자원을 제공하며, 직원 재교육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li> </ul>                                                                                                                                               |
|                              | 의료·보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식품의약품 규제 체계 유지)</b> 식품의약국을 AI 기반 의료기기의 주요 규제기관으로 유지하고,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가 AI 의료기기에 적합한 만큼 중복적이거나 상충되는 규제 신규 도입 금지</li> <li>▪ <b>(임상의 중심 활용 환경 보장)</b> AI를 임상 의사결정이 아닌 지원 도구로 활용하여 임상의가 환자 치료의 중심에 있도록 하고, 의료진의 AI 도구 활용에 대한 감독권 보장</li> <li>▪ <b>(수가제도 개선)</b> AI 기술 기반 치료에 대한 적절한 의료수가 정책을 구축하고, 고임상가치 AI에 대해 새로운 의료진 중심 수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메디케어 보험 적용 체계 확보</li> </ul> |
|                              | 전문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3자 보증 체계 도입)</b> AI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제3자 보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공인회계사와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의 증명 기준에 따른 AI 보증 업무 수행</li> <li>▪ <b>(인간 중심 접근)</b> AI가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활용되도록 하며, AI 전환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li> </ul>                                                                                                                        |
|                              | 정보통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위험 기반 규제)</b> AI 거버넌스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을 구현하여 고위험 AI 시스템에 규제를 집중하는 등 기업 규모와 AI 공급망에서의 역할에 따라 규제 차등 적용</li> <li>▪ <b>(연방 통합 프레임워크 구축)</b> 연방 차원의 통합된 AI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주별로 분산된 규제의 복잡성을 방지하고 연방 규제가 주 정부 규제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li> <li>▪ <b>(소규모 기업 지원)</b> 소규모 기업들이 AI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 부담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과도한 규제 부담 없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ul>          |

| 조직 구분                |          | 주요 내용                                                                                                                                                                                                                                                                                                                                                                                                                                                                                                              |
|----------------------|----------|--------------------------------------------------------------------------------------------------------------------------------------------------------------------------------------------------------------------------------------------------------------------------------------------------------------------------------------------------------------------------------------------------------------------------------------------------------------------------------------------------------------------|
| AI<br>활용<br>산업<br>협회 | 제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식재산권 보호)</b>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한 데이터셋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 규칙과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AI 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 평가</li> <li>▪ <b>(공급망 안전성 확보)</b> 전자제조업을 경제·국가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로 인정하고,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하드웨어 공급망에서 미국의 취약점 해결하여 핵심 전기 부품의 안정적 공급 확보</li> <li>▪ <b>(자율주행차 지원)</b> 자율주행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연방 자동차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 자율주행 안전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하는 등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li> </ul>                                                                                                                  |
|                      | 범산업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기업 지원)</b> 소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AI 자원, 데이터, 컴퓨팅 파워에 접근할 수 있는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AI연구자원 파일럿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li> <li>▪ <b>(국경 간 데이터 접근)</b> AI 시스템의 개발과 배포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셋이 필수적 임에 따라 데이터의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이동 촉진</li> <li>▪ <b>(민간 투자 장려)</b> 친투자 정책을 강력히 권고하고, 과도한 규제나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소상공인 및 AI 스타트업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가벼운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li> </ul>                                                                                                                                  |
| 창작자 협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저작권 보호 강화)</b> AI 모델 훈련에 저작권 보호 콘텐츠 활용 시 반드시 사전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고, 기존 미국 저작권법을 유지하는 한편 해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 조항에 반대</li> <li>▪ <b>(자유시장 라이선싱 체계 구축)</b> 자유시장 기반 라이선싱 체계를 구축하여 출판사·기술업체 간 라이선싱 시장을 활성화하고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대규모 저작물을 복사하는 행위를 중단</li> <li>▪ <b>(투명성 강화)</b> AI 기업들의 훈련 데이터 출처와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AI 모델의 훈련 자료에 대한 투명성 요구사항을 도입하며, 정확한 사용 기록 보관을 의무화</li> <li>▪ <b>(딥페이크 규제)</b> 무허가 딥페이크로부터 개인의 음성과 초상권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신원 보호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지정</li> </ul> |
| 기타<br>협회             | 교육·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초 연구 투자)</b> 국가AI연구소를 지속 지원하고, 국립과학재단 예산 삭감을 중단하여 국가AI연구 자원과 과학기술혁신 이니셔티브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기초 AI 연구에 대한 연방 투자 확대</li> <li>▪ <b>(AI 교육 강화)</b> 전 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K-12부터 대학원까지 포괄하는 AI 교육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학부 STEM 교육과정에 데이터 사이언스 통합</li> </ul>                                                                                                                                                                                                            |
|                      | 국제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동맹국 AI 협력)</b> 미국 동맹국에 대한 AI 기술 수출 제한을 완화하여 미국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및 확장을 지원하고 유럽 내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li> <li>▪ <b>(글로벌 표준화)</b> 미국의 혁신 중심 AI 거버넌스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미국 AI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접근을 보장하며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보호</li> </ul>                                                                                                                                                                                                                                                        |
|                      | 권익·시민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편향성 방지)</b> AI 시스템의 편향성과 차별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정기적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며, 특히 주택·금융 분야에서 활용되는 AI의 투명성 강화</li> <li>▪ <b>(인간 중심 감독)</b> AI 기반 행정업무 자동화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인간 중심의 감독 보장</li> </ul>                                                                                                                                                                                                                                                     |
|                      | 도서관·정보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정이용 확대)</b> AI 훈련 목적의 콘텐츠 수집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한편, 공정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라이선스 조항의 집행 금지 및 저작권법·예외·제한 규정 우선 적용</li> <li>▪ <b>(정보관리 표준 마련)</b> AI 생성물에 대한 출처 인용과 메타데이터 표준 적용을 통해 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관리 전문가를 AI 감독 인력으로 활용하는 인간 개입 관리 체계 구축</li> </ul>                                                                                                                                                                                                                                  |
|                      | 정책옹호·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포괄적 AI 전략 수립)</b> 단순 연구 자금 지원이 아닌 국가 권력의 모든 도구를 통합하고 증폭시키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으로 AI를 경제, 군사, 정치 분야의 핵심 역량으로 활용</li> <li>▪ <b>(위험 기반 규제)</b> AI 모델에 대해 가벼운 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 모델의 실제 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차별화된 규제 시행</li> <li>▪ <b>(국가AI위원회 설립)</b> 초당적 국가AI위원회를 설립하고, 다학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AI가 거시경제 및 생산성, 군사 역량, 노동시장 변화 등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 개발</li> </ul>                                                                                                           |
|                      | 지식재산권·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식재산권 보호)</b> AI 표준화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이 특허를 남용하여 미국 기업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특허 금지 명령을 통해 불공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li> </ul>                                                                                                                                                                                                                                                                                                                                            |

[ 학계 주요 의견 ]

| 조직 구분    | 주요 내용                                                                                                                                                                                                                                                                                                                                                                                                                                                                                                                                                                                                                                                                                                                                                                                                                                                        |
|----------|--------------------------------------------------------------------------------------------------------------------------------------------------------------------------------------------------------------------------------------------------------------------------------------------------------------------------------------------------------------------------------------------------------------------------------------------------------------------------------------------------------------------------------------------------------------------------------------------------------------------------------------------------------------------------------------------------------------------------------------------------------------------------------------------------------------------------------------------------------------|
| 종합대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구 인프라 확대)</b> 국가AI연구자원 구축과 예산 확대를 통해 대학 간 AI·데이터·컴퓨팅 역량 연계를 지원하고, 학계와 스타트업의 클라우드 자원 접근성 강화</li> <li>▪ <b>(AI 교육 및 인력양성 강화)</b> 미국 시민 대상 박사급 펠로우십을 제공하고, K-12부터 대학원까지 AI 교육의 단계별 확대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 기반 구축</li> <li>▪ <b>(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b> 대학·산업·정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업이 후원하는 대학의 AI 연구 클러스터 확대를 통해 대학 등 지역 AI 혁신 허브를 테스트베드로 활용</li> <li>▪ <b>(기초연구 투자 지속)</b> 국방고등연구계획국,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등 연방 기관의 AI 기초 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장기적 관점의 고위험·고수익 연구에 대한 지속 지원</li> <li>▪ <b>(피지컬 AI 및 응용연구 확대)</b>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실세계 기반 AI(Embodied AI) 개발과 의료, 에너지, 정밀농업 등 국가 핵심 분야로의 적용 확대를 통한 실용화 촉진</li> <li>▪ <b>(윤리적 AI 거버넌스 구축)</b>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기준 수립과 위험 수준에 비례한 감독체계 도입, 설계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포함하는 '설계 기반 안전' 원칙 적용</li> <li>▪ <b>(지역 균형발전 고려)</b> 지역의 AI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과 지리적 형평성을 고려한 공공·민간 AI 투자 배분을 통해 지역 특화 분야 우선 지원</li> </ul> |
| AI·컴퓨터과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구 인프라 확대)</b> 국가AI연구자원 파일럿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전면적 자금 지원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확장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li> <li>▪ <b>(차세대 AI 기술 개발)</b> 신경과학 기반 AI(NeuroAI) 및 신경형 컴퓨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현재 AI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 초지능(ASI) 기술 기반 마련</li> <li>▪ <b>(AI 안전성·신뢰성 강화)</b> 견고하고 해석가능한 AI 개발을 우선하고, 생물학적 기반 모델의 악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식품의약품 모델을 참고한 독립 AI 규제기관 설립</li> <li>▪ <b>(기초연구 투자 지속)</b> 국립과학재단 및 국방부의 초기 단계 기초 연구 지원을 유지하고, AI+과학 융합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27개 국가AI연구소의 역할 강화 추진</li> <li>▪ <b>(AI 인재양성 체계 구축)</b>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CyberCorps')을 참고하여 'AI-Corps' 장학 제도를 신설하고,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을 연결하는 국가 AI 연구·교육 플랫폼(NRP AIRE) 구축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li> <li>▪ <b>(개방형 AI 생태계 보호)</b> 오픈소스 AI 도구와 훈련 데이터 개발을 지원하고, 중국과 유럽의 공격적 투자에 대응해 미국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li> </ul>                                                                                 |
| 경영·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생산성 향상 정책 지원)</b> AI를 활용한 생산성 제고와 혁신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대학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li> <li>▪ <b>(핵심 분야 R&amp;D 투자)</b> 에너지·바이오테크 등 전략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과학적 성과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li> <li>▪ <b>(노동시장 적응 지원)</b>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통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해 AI 리터러시 강화</li> <li>▪ <b>(스마트 규제 체계 구축)</b> 국립표준기술연구소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와 같은 연성법(Soft Law) 접근을 유지하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 체계 마련</li> </ul>                                                                                                                                                                                                                                                                                                                                                                       |
| 공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생물학 융합 안전성 강화)</b> AI가 생성한 위험성 있는 유전자 서열에 대한 핵산 합성 스크리닝을 강화하고, 생물보안 위험 완화를 위한 포괄적 규제 및 거버넌스 체계 마련</li> <li>▪ <b>(물리학 기반 AI 개발)</b>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넘어서는 물리학 기반 AI와 해석가능한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실제 환경을 반영한 국가 AI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li> <li>▪ <b>(에너지 효율성 최적화)</b> 대규모 AI 모델의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고효율 AI 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지속가능성 제고</li> <li>▪ <b>(인간-AI 협력 시스템 구축)</b> 인간과 AI 간 협력을 위한 투명한 팀워크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AI-인간-사이버물리시스템 간 시너지를 촉진하는 정책 추진</li> <li>▪ <b>(데이터 표준화 인프라 마련)</b>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센터를 설립하고, 고품질 표준화 데이터셋 제공을 통해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li> </ul>                                                                                                                                                                                                                                          |

| 조직 구분   | 주요 내용                                                                                                                                                                                                                                                                                                                                                                                                                                                                                                                                                                                                                                                                                                                             |
|---------|-----------------------------------------------------------------------------------------------------------------------------------------------------------------------------------------------------------------------------------------------------------------------------------------------------------------------------------------------------------------------------------------------------------------------------------------------------------------------------------------------------------------------------------------------------------------------------------------------------------------------------------------------------------------------------------------------------------------------------------|
|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리터러시 국가 전략화)</b> 전 국민의 AI 리터러시를 국가 교육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교사 양성 과정에 AI 리터러시를 필수 교육으로 포함하여 체계적인 AI 교육 역량 강화</li> <li>▪ <b>(교사 대상 AI 교육 강화)</b> 교사 대상 AI 역량 강화 챌린지 신설, '디지털 프런티어 교육단' 펠로우십 프로그램 도입, 교육부의 국가 중점 분야에 AI·데이터과학·머신러닝 추가 추진</li> <li>▪ <b>(인간 중심 AI 설계)</b> 인간을 보완하는 AI 모델 설계를 장려하고, 교육 맥락에서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수립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공평한 AI 접근성 보장</li> </ul>                                                                                                                                                                                                                                                                                                                         |
| 농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농업 연구 강화)</b> AI와 농업 분야의 융합연구 지원 확대 및 학제 간 협력을 통해 농업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대학-산업-스타트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li> <li>▪ <b>(농촌 지역 AI 접근성 보장)</b> 농촌 지역을 포함한 모든 커뮤니티가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적 AI 배포 정책을 개발하고 중서부 지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AI 기반 발전 전략 수립</li> </ul>                                                                                                                                                                                                                                                                                                                                                                                                                                                    |
| 법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소기업 대상 계층적 규제)</b>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기업 규모·수익·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계층적 AI 규제 체계 마련</li> <li>▪ <b>(중소기업 AI 지원 강화)</b> IT 인력이나 법무팀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AI 도구 활용 가이드와 공공 자원을 제공하고, 국립과학재단의 'America's Seed Fund' 예산 증액</li> <li>▪ <b>(AI 신뢰성 연구 투자)</b> AI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 투자 확대와 참여형 AI 연구 및 기술적 평가 방법 개발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신뢰도와 경쟁력 유지</li> <li>▪ <b>(AI 투명성 및 거버넌스 개선)</b>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등 기본적 투명성 확보 조치를 도입하고, 시민 참여 기반 거버넌스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증거 기반 정책 수립</li> </ul>                                                                                                                                                                                                                       |
| 의학·보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생물보안 표준 수립)</b> AI 모델의 생물보안 취약성 평가 및 테스트 방법 개발을 위해 연방 차원의 AI 안전·생물보안 전문 기관 활용</li> <li>▪ <b>(의료 AI 파트너십 강화)</b> 의료 시스템과 AI 개발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체계 구축</li> <li>▪ <b>(고품질 의료 데이터 활용)</b> 미국 국립보건원의 Bridge2AI 프로젝트 등 고품질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 모델 훈련 및 실제 환경 테스트 활용 확대</li> <li>▪ <b>(의료 AI 투명성 강화)</b> 의료기관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AI 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AI 기업에 '소스 속성' 공개를 포함한 기본 투명성 요구사항 도입</li> <li>▪ <b>(통합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b> 전자의무기록 벤더, AI 기업, 연구기관 간 규제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적용가능한 통합된 AI 규제 접근법 정립</li> <li>▪ <b>(환자 데이터 보호 강화)</b> 의료 AI 도구 사용 시 환자 데이터 프라이버시·보안 보장, 환자 대상 명확한 고지 체계 확립,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적 안전 표준 강화</li> </ul>                     |
| 정책·사회과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간 번영 강조)</b> 물리적·정신적 건강, 의미와 목적, 인격과 덕성, 사회적 관계, 경제적 안정성, 행복 등을 포괄하는 인간 번영 측정 지표 개발 및 AI 정책 평가 체계 구축</li> <li>▪ <b>(수정헌법 기반 AI 규제)</b> 수정헌법 제1조(언론의 자유)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정부의 검열과 압력 행사를 피하고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체계 구축</li> <li>▪ <b>(단계별 AI 보안 거버넌스 구축)</b> AI 시스템의 능력 수준에 따른 단계별 보안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및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별적 규제 접근법 도입</li> <li>▪ <b>(군사 AI 전략적 전환)</b> AI의 신속한 실전 배치를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모듈형·적응형 AI 아키텍처와 반복 개발 체계를 기반으로 실시간 전장 학습 시스템 개발 추진</li> <li>▪ <b>(성적 디페이크 대응 강화)</b> 디페이크 성적 이미지의 탐지·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생성 도구에 대한 기술기업의 홍보를 금지하며, 아동 성 착취물의 신속한 제거 의무화</li> <li>▪ <b>(AI 국가안보 협력 추진)</b>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및 수출통제 강화와 함께, 대학 중심의 AI 기반 국방 기술 연구 체계 구축 추진</li> </ul> |

[ 비영리 단체 주요 의견 ]

| 조직 구분    | 주요 내용                                                                                                                                                                                                                                                                                                                                                                                                                                                                                                      |
|----------|------------------------------------------------------------------------------------------------------------------------------------------------------------------------------------------------------------------------------------------------------------------------------------------------------------------------------------------------------------------------------------------------------------------------------------------------------------------------------------------------------------|
| AI 거버넌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방 규제 체계 통합)</b> 주정부 간 상충하는 AI 규제 법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 체계 체계를 마련하고 연방정부의 AI 정책 주도권 강화</li> <li>▪ <b>(민주적 AI 구현)</b> 시민이 AI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의 조달 역량을 활용해 고품질의 민주적 AI 시장 조성</li> <li>▪ <b>(AGI 안전 거버넌스)</b> AGI 개발 시점 및 초지능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AI 정렬 문제 해결과 AGI 프로젝트 권한 분산을 통한 안전 체계 마련</li> <li>▪ <b>(AI 개발 가속화)</b> 제한 없는 AI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오픈소스 AI 개발 적극 촉진 및 규제 지양을 통해 혁신 친화적 거버넌스 구축</li> </ul>              |
| 경제·금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접근성 확대)</b> 정부 기관-대학-기술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해 AI 리터러시 및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률적 규제 방식 지양</li> <li>▪ <b>(연방 규제 체계 통합)</b> 주별 분산 규제를 방지하고, 증거 기반 위험 중심 규제와 기존 법률 기반의 결과 중심 규제를 결합한 연방 차원의 통합 법률 체계 마련</li> <li>▪ <b>(노동시장 전환 지원)</b> 노동 중심 세제에서 AI 생산성 기반 세제로 전환하고, AI 기반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과 자동화 도입에 대한 노동자 발언권 보장 및 재교육 확대</li> </ul>                                                                                                                        |
|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포괄적 AI 리터러시 교육 추진)</b>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국가 AI 리터러시 체계를 구축하고 연방 교육기관을 통한 AI 교육 역량 강화 및 글로벌 AI 교육 파트너십 추진</li> <li>▪ <b>(교육 AI 활용 기반 구축)</b> 연방정부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K-12 학교 대상 컴퓨터과학 및 AI 교육 확대, 교사 의무 AI 연수 강화, 학생 데이터 보호 등의 정책 수립</li> </ul>                                                                                                                                                                                                                             |
| 안보·방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위협 대응)</b> AI를 위한 포괄적 국가 보안 전략 수립과 AI 안전연구소 권한 강화 및 생화학·사이버 공격 방어 강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AI 위협 대응 체계 구축</li> <li>▪ <b>(기술 수출 통제)</b> 미국 AI 기술의 경쟁국 및 적국 유출 차단을 위해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AI 연구소의 보안 요구사항 강화</li> <li>▪ <b>(AI 인재 유치·유지)</b> AI 관련 직종의 이민 절차 간소화, 국내 비자 갱신 허용, 미사용 영주권 재할당 등을 통해 AI 인재 유치·유지 강화</li> </ul>                                                                                                                                          |
| 권익·인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균형 잡힌 AI 규제 추진)</b>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AI 기술의 자유로운 경쟁과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위한 규제 실험 환경 조성</li> <li>▪ <b>(취약계층 보호)</b> AI 안전성 및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대상 고위험 AI 사용 금지와 AI 기반 아동 성 학대 자료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역량 강화</li> <li>▪ <b>(포괄적 개인정보 보호)</b> 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고, 공공에 AI 도입 시 의견 수렴 과정 의무화 및 투명성 강화</li> <li>▪ <b>(다양성·포용성 증진)</b> 원주민의 디지털 주권 인정, 다문화 커뮤니티 중심 AI 혁신 구역 설립, AI 시스템의 편향성 감사 및 영향 평가 의무화를 통해 공정한 AI 생태계 구축</li> </ul> |
| 기술·연구·혁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혁신 생태계 구축)</b> 오픈소스 AI 생태계 촉진과 국가AI연구자원 정규 사업화를 통해 AI 연구 민주화 및 데이터·모델 등 핵심 AI 개발 자산의 공유와 협력 촉진</li> <li>▪ <b>(AI 인프라 다변화)</b> 반도체 자체 제조 역량 강화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미국 내 기술 혁신 생태계 확대 및 친환경 기술 도입</li> <li>▪ <b>(데이터 경제 구축)</b> 국가 차원의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데이터 투자 촉진 정책 및 AI 서비스 간 사용자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통해 시장 경쟁 강화</li> </ul>                                                                                                                                            |
| 문화·예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저작권 보호 강화)</b> AI 기업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즉각 중단시키고, 원저작자에 대한 무보상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체계 마련</li> <li>▪ <b>(공정사용 및 라이선싱 촉진)</b> AI 훈련에 대한 공정사용을 명시하는 입법 조치를 추진하고, 저작권자와 AI 기업 간의 자율적 라이선스 거래 촉진</li> </ul>                                                                                                                                                                                                                                                               |

| 조직 구분    | 주요 내용                                                                                                                                                                                                                                                                                                                                                                                                                                                                                                                                       |
|----------|---------------------------------------------------------------------------------------------------------------------------------------------------------------------------------------------------------------------------------------------------------------------------------------------------------------------------------------------------------------------------------------------------------------------------------------------------------------------------------------------------------------------------------------------|
| 법률·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법률 서비스 AI 도입)</b> 법률 서비스 분야에 AI 도구를 도입하여 법률 접근성 및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AI 기반 법률 연구와 지원 도구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li> <li>▪ <b>(사법 AI 거버넌스 마련)</b> 법원 내 AI 활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역할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법조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li> </ul>                                                                                                                                                                                                                                                                 |
| 에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에너지 인프라 통합)</b> AI, 고성능컴퓨팅, 비트코인 채굴 등 기술 수요를 고려하여 범정부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전력망 안정화 기술 도입</li> <li>▪ <b>(청정 전력 공급 확대)</b>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원자력 활용을 확대하고, 송전망 확장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연계하여 대규모 전력 수요 충족</li> </ul>                                                                                                                                                                                                                                                                                         |
| 의료·보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료 AI 체계 정비)</b> 보건복지부 내 AI 전문가 조직(AI Corps) 신설, 식품의약품의 AI 기술 특성을 반영한 위험 기반 규제 도입, AI 도구 승인 절차의 현대화 등 체계 정비</li> <li>▪ <b>(위험 기반 의료 AI 규제)</b>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AI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저위험 AI에 대한 간소화 적용, 사후 맥락별 차등 규제 등 기술 혁신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적용</li> <li>▪ <b>(연방 의료 AI 표준 마련)</b> 주정부별로 상이한 AI 규제에 대해 연방정부 우선권을 확보하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채택 및 국가 차원의 의료 AI 등록 시스템 구축</li> <li>▪ <b>(의료진 중심 AI 활용)</b> AI는 의료진의 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한정하며, 특히 의료 필요성 판단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의료진의 AI 도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li> </ul> |
| 정책·거버넌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규제 접근 방식 전환)</b> AI 규제에 대한 학습 기간을 설정하고 증거 기반 접근법을 강화하는 한편, 이론적 위험보다는 실제 피해 입증 후 대응 원칙 확립</li> <li>▪ <b>(AI 공급망 및 인프라 확대)</b> AI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하고, 연방 조달 권한을 활용한 개방형 표준 지원 및 특별 컴퓨팅존 구축</li> <li>▪ <b>(AI 인재 유치 정책)</b> 해외 STEM 전문가가 미국 AI 인력의 핵심 구성요소를 인정하고 기존 이민 경로 개선·유지 및 연방정부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기반 채용 확대</li> <li>▪ <b>(국제 AI 협력 강화)</b> 걸프 국가와의 AI 협력 강화를 위해 수출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li> </ul>                                       |
| 제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조업 AI 통합 전략)</b> 제조업 분야 AI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Manufacturing USA 기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민간 및 국방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AI 통합 전략 추진</li> <li>▪ <b>(제조업 자산 보안)</b> 정부 지원으로 축적된 제조업 핵심 데이터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데이터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체계 구축</li> </ul>                                                                                                                                                                                                                                                           |
| 종교·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간 존엄성 기반 AI 개발)</b> AI 개발 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본질을 인정하는 원칙을 포함하고 트랜스휴머니즘 및 물질주의적 관점을 배제한 인간 중심적 AI 개발 추진</li> <li>▪ <b>(가족 중심 정책 수립)</b> AI가 가족과 아동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AI의 인간관계 대체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심화와 혼인을 감소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li> </ul>                                                                                                                                                                                                                                                                    |
| 통신·인프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분산형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b> 미국 전역에 지리적으로 분산된 인터넷 교환 지점 시설을 구축하여 AI 활용에 필요한 초저지연 연결 환경 조성 및 데이터 트래픽 비효율성 해결</li> <li>▪ <b>(국가 네트워크 목표 설정)</b> 광대역 서비스 지역이 주요 인터넷 교환 지점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도록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 투자를 통해 전국적 연결성 강화</li> </ul>                                                                                                                                                                                                                                                                  |
| 표준·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민간 주도 표준화)</b>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 표준화 노력을 우선시하고, AI 위험 계층화 등 핵심 영역의 기술 및 안전 표준 개발</li> <li>▪ <b>(기술 표준 마련)</b> 용어, 데이터 아키텍처, 안전·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AI 기술 표준 개발에 지속적이고 우선적으로 참여</li> </ul>                                                                                                                                                                                                                                                                                            |
| 환경·지속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에너지 효율성 제고)</b> AI 에너지 효율성 표준을 수립하고 개발자들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AI 개발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강화</li> <li>▪ <b>(환경 영향 최소화)</b> AI의 환경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 기준을 마련하고, AI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수자원 및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li> </ul>                                                                                                                                                                                                                                                                          |

## 부록2 | 「AI 실행계획」 내 명시된 행정명령

| 행정명령 번호  | 서명일       | 제목                                                  | 주요 내용                                                                                          |
|----------|-----------|-----------------------------------------------------|------------------------------------------------------------------------------------------------|
| EO 14110 | '23.10.30 |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                  | AI 시스템의 안전·보안·책임성 보장을 위한 8대 원칙 기반 정책·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을 통한 책임 있는 AI 생태계 주도                    |
| EO 14156 | '25.01.20 |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 미국의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에너지 자원의 식별, 임대, 개발, 생산, 운송, 정제 및 발전 촉진                        |
| EO 14179 | '25.01.23 | AI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                           | 미국의 AI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기존 AI 규제를 철폐하고, 신규 AI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증진                         |
| EO 14192 | '25.01.31 | 규제 철폐를 통한 번영 촉진                                     |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최소 10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 비용을 엄격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규제 부담 완화                                 |
| EO 14213 | '25.02.14 | 국가 에너지 지배 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설립 |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고, 국내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경제 성장 및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립                               |
| EO 14255 | '25.03.31 |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 설립                                     |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해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 설립                          |
| EO 14277 | '25.04.23 | 미국 청소년을 위한 AI 교육 증진                                 | AI 혁명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위해 청소년의 AI 이해력과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
| EO 14278 | '25.04.23 | 미래의 고임금 숙련직 일자리를 위한 미국인 준비                          | 미국의 재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근로자들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 생산과 최첨단 기술 구현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
| EO 14306 | '25.06.06 |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지속 및 기존 행정명령(EO 13694, 14144) 개정     | 기존 사이버 보안 정책의 주요 요소들을 유지 및 재조정하면서 연방 디지털 인프라·소프트웨어 보안, 위협 대응 역량, 차세대 암호체계, AI 보안 등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 |

## 참고문헌

- 1) Zakrzewski, C. (2024, 7, 16). Trump allies draft AI order to launch 'Manhattan Project' for defense.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4/07/16/trump-ai-executive-order-regulations-military/>
- 2) Hendrix, J. (2025, 7, 25). Transcript: Donald Trump's address at 'Winning the AI Race' event. *Tech Policy Press*. <https://www.techpolicy.press/transcript-donald-trumps-address-at-winning-the-ai-race-event/>
- 3) Iyer, P. (2025, 7, 25). Reactions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AI Action Plan. *Tech Policy Press*. <https://www.techpolicy.press/reactions-to-the-trump-administrations-ai-action-plan/>
- 4) Levy, S. (2025, 7, 25). Trump's anti-bias AI order is just more bias. *Wired*. [https://www.wired.com/story/trump-ai-order-bias-openai-google/?utm\\_source=chatgpt.com](https://www.wired.com/story/trump-ai-order-bias-openai-google/?utm_source=chatgpt.com)
- Robins-Early, N., & Gambino, L. (2025, 7, 24). Trump signs executive orders targeting 'woke' AI models and regulation.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jul/23/trump-executive-orders-woke-ai?utm\\_source=chatgpt.com](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jul/23/trump-executive-orders-woke-ai?utm_source=chatgpt.com)
- 5) Venzke, C. (2025, 7, 23). ACLU comment on Trump administration's AI Action Plan. *ACLU*. <https://www.aclu.org/press-releases/aclu-comment-on-trump-administrations-ai-action-plan>
- 6) Wood, C. (2025, 7, 23). Defeated AI moratorium finds new life in Trump's AI Action Plan. *StatesCoop*. <https://statescoop.com/trump-ai-action-plan-state-moratorium/>
- 7) Marshall, C. (2025, 7, 23). White House unveils sweeping AI Action Plan to remake grid. *E&E News*. <https://www.eenews.net/articles/white-house-unveils-sweeping-ai-action-plan-to-remake-grid/>
- 8) Iyer, P. (2025, 7, 25). Reactions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AI Action Plan. *Tech Policy Press*. <https://www.techpolicy.press/reactions-to-the-trump-administrations-ai-action-plan/>
- 9) Bikales, J., & Tamborrino, K. (2025, 7, 23). Trump switches off power line project financing amid AI scramble for new energy. *Politico*. <https://www.politico.com/news/2025/07/23/trump-opposition-green-power-clashes-ai-agenda-00471977>
- 10) St. John, J. (2025, 7, 23). Trump admin cancels \$4.9B loan for biggest transmission line in US. *Canary Media*. <https://www.canarymedia.com/articles/transmission/grain-belt-express-trump-loan-canceled>
- 11) St. John, A. (2026, 7, 25). Trump's AI plan calls for massive data centers. Here's how it may affect energy in the US. *AP*. <https://apnews.com/article/trump-artificial-intelligence-energy-data-centers-f216660b80f992ae303b348dac0b2f87>
- 12) Kerr, D. (2025, 7, 25). The real winners from Trump's 'AI Action Plan'? Tech companie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5/jul/25/trump-ai-action-plan?utm\\_source=chatgpt.com](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5/jul/25/trump-ai-action-plan?utm_source=chatgpt.com)
- 13) Calma, J. (2025, 7, 29). Trump's AI plan is a massive handout to gas and chemical companies. *The Verge*. [https://www.theverge.com/climate-change/714900/trump-ai-plan-executive-order-handout-gas-coal-chemical-companies?utm\\_source=chatgpt.com](https://www.theverge.com/climate-change/714900/trump-ai-plan-executive-order-handout-gas-coal-chemical-companies?utm_source=chatgpt.com)
- 14) AI Now Institute. (2025, 7, 22). People's AI Action Plan launches to provide counter-weight to Trump's industry-backed AI plan and EOs. <https://ainowinstitute.org/news/announcement/peoples-ai-action-plan-launches-to-provide-counter-weight-to-trumps-industry-backed-ai-plan-and-eos>
- 15) Mallaby, S., Brandt, J., Horowitz, M. C., Duffy, K., Dumbacher, E. D., Doshi, R., & Hillman, J. E. (2025, 7, 24). The opportunities and risks inherent to Trump's AI Action Pl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article/opportunities-and-risks-inherent-trumps-ai-action-plan>
- 16) Krasodomski, A. (2025, 7, 29). Trump's AI Action Plan seeks customers, not partners. *Chatham House*. <https://www.chathamhouse.org/2025/07/trumps-ai-action-plan-seeks-customers-not-partners>

- 17) Krasodonski, A. (2025, 7, 29). Trump's AI Action Plan seeks customers, not partners. *Chatham House*. <https://www.chathamhouse.org/2025/07/trumps-ai-action-plan-seeks-customers-not-partners>
  - 18) Meinhardt, C., Zhang, D., King, J., Haupt, A., & Cryst, E. (2025, 7, 24). Inside Trump's ambitious AI Action Plan.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hai.stanford.edu/news/inside-trumps-ambitious-ai-action-plan>
  - 19) Atlantic Council experts. (2025, 7, 23). Experts react: What Trump's new AI Action Plan means for tech, energy, the economy, and more.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experts-react-what-trumps-new-ai-action-plan-means-for-tech-energy-the-economy-and-more/>
  - 20) Trump's AI plan faces legal obstacle amid bias-free requirements. *AInvest*. <https://www.ainvest.com/news/trump-ai-plan-faces-legal-obstacles-bias-free-requirements-2507/>
- Werth, T. B. (2025, 7, 24). What is woke AI? Decoding the White House's new target. *Mashable*. <https://mashable.com/article/what-is-woke-ai>